

# 한국의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효과: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우 대 형\*\*

## 요약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율의 소작료가 소작농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을 빼앗으며, 또한 대토지소유자가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농지개혁은 소득효과와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1950년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이 실제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추정 결과, 한국의 농지개혁은 소득효과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으며,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경로를 통해 미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농지개혁, 인적자본, 초등학교 취학률, 일본제국주의, 유교

## I. 서 론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지를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김성호 외, 1989 부록 2)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즉 한국의 농지개혁은 명시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을 자신의 목표로 내세운 바가 없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29815).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mail: woodaehyung@google.com

행된 이후 학교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자의 관계를 인과관계(causality)로 해석해 왔다(권병탁, 1984; 서찬수, 1987; 장상환, 2001). 농지개혁 덕분에 소작농은 더 이상 지주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그 액수만큼 소득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향상된 소작농의 경제력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주계급이 사라진 것 또한 학교 교육을 폭발적 증가시킨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한다(Galor et al., 2009; Galor, 2011; 차명수, 2014). 농지개혁 이전에는 지주계급의 반대로 공교육 시설이 과소 투자될 수밖에 없었는데, 농지개혁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공교육 투자 확대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 주장에 따르면, 농지개혁은 소득효과 외에 공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되어온 지주계급의 제거에 따른 정치경제학적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설은 매우 그럴 듯 해 보이며 또 결과적으로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엄밀한 계량경제학적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sup>1)</sup> 취학의 결정은 토지소유의 유무 외에도 입시제도, 학교 공급 등 여타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방 이후 취학률의 가파른 증가세가 농지개혁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으며, 더욱이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농지개혁이 여전히 취학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950년대에는 농가수지를 위협하는 요인들 — 예컨대 영세화의 심화, 자재 부족에 따른 미곡생산성의 하락, 미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따른 저곡가, 임시토지수득세를 포함한 높은 조세부담 등 —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소작료의 절약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이들 위협 요인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명희(1992)에 따르면, 1954~58년간 농가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1950년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절량농가의 비율은 1930년대 초의 48%(조선총독부,

1) 농지개혁이 농업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접근은 우대형(2001), 조석관(2007) 그리고 최근에는 Park, Jongryong(2019)과 Cha, Myung Soo(2020)에 의해 시도되었다.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2: 61)보다 높은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1956~58년의 앵겔계수 66~72는 1930년 『조선농가조사』에 나타난 농민의 앵겔계수 56~69(허수열, 1981: 219)과 1938년 경성 土幕民의 평균 앵겔지수 61(長鄉衛二, 1938)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농지개혁 이후 농촌의 생활수준이 이전에 비해 실제 나아졌는지도 불확실하다.

식민지 시기 한국의 지주들이 공교육의 투자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소멸과 공교육시설의 확대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많은 실증결과들은 일제시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립학교 설립운동에 지주들이 그 지역의 유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진동, 1998; 한우희, 1998; 오성철, 2000; 임삼조, 2006).

그럼에도 과연 한국의 농지개혁이 해방 이후 취학률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만일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증가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농지개혁은 어떤 경로를 통해 취학률의 증가에 기여하였을까? 소득효과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채널을 통해서인가(혹은 둘 다인가)? 이 글은 농지개혁 전후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효과와 그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identification strategy)은 농지개혁 이전 각 지역별 소작지율 간에 작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다. 즉 농지개혁이 취학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면, 농지개혁의 수혜 대상인 소작농에게 분배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 즉 농지개혁 이전에 소작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취학률의 증가폭이 컸을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추정결과가 이를 지지해주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농지개혁이 취학률을 증가시킨 경로가 소득효과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논이 밭보다 수익율과 농지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활용하였다. 즉 여타 조건이 같다면, 밭보다는 논을 분배받은 소작농의 소득효과가 더 컸을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소작지 비율이라도 밭 소작지율 대비 논 소작지율이 높았던 지역의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농지개혁이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채널을 통해서 취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지주의 영향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학교 공급수와 소작지율의 관계가 농지개혁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Galor의 정치경제학적 채널이 타당하다면, 농지개혁 이전 시기에는 소작지율과 학교 공급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개혁 이후에는 공교육 확대를 저지해온 지주계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자 간의 음(-)의 관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학교 공급이 상대적으로 과소 투자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양(+ )의 관계로 반전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Ⅱ절에서는 토지불평등을 포함하여 취학률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한다. 제Ⅲ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경상도 40개 군의 1938~55년간 취학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설명변수들을 살펴본다. 이어 제Ⅳ절에서는 경상도 40개 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938~55년 취학률의 증가폭을 피설명변수로, 소작지율과 기타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놓고 실시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절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 Ⅱ. 관련 연구: 취학률의 결정요인과 농지개혁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업료, 교재비, 잡비, 교통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여기에 학교를 다님으로써 벌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추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를 원한다. 일제시기에는 ‘세계 유일, 전대미문’(전봉관, 2008)의 초등학교 입학시험까지 치러야 했다. 그들은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학교를 보내려고 했을까? Goldin and Katz(1999)는 이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먼저 1기와 2기 두 기간만 있으며, 1기에 학교를 다니는데 비용은 C만큼 들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w_1$ 의 소득을 번다고 하자. 2기에는 졸업과 함께  $w_2(>w_1)$ 를 벌고 1기의 할인율(discount rate)은  $r$ 이라고 하면,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결국 졸업 이후 ‘학력 프리미엄’(schooling

premium)의 현재가치  $(w_2-w_1)/(1+r)$ 가 학교를 다닐 때의 비용  $(c+w_1)$ 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학의 결정에는 이 세 가지 요인 - 즉 학력 프리미엄, 금리, 학비 - 과 함께 아이 및 가족의 특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아이의 나이와 건강, 인지 능력 등은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고 학업 성적은 졸업 이후의 학력 프리미엄( $w_2-w_1$ )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수준과 자녀의 취학 사이에는 양(+ )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취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et al., 2006; Zhao and Glewwe, 2010).

그러나 가족의 여러 특성 중에서 부모의 학력수준과 함께 취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이다(Behrman and Knowles, 1997; Filmer and Pritchett, 1999; Huang et al., 2010). 만일 아이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동일한 이자율로 현재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는 취학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대부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율은 소득과 토지 등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은 미래의 학력 프리미엄을 담보로 오늘의 학자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높은 이자율에 직면하고 있는 빈농들은 자식의 교육에 그만큼 덜 투자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Galor and Zeira, 1993; Deininger and Squire, 1998). 오늘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빈곤'을 1순위로 꼽고 있는 이유이다(Lavy, 1996 table 2; Behrman and Knowles, 1999; Brown and Park, 2002). 한우희(1998)에 따르면, "일제시기 학령 아동을 갖고 있는 조선인 학부형중 상당수가 입시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주 원인"도 가난 때문이었다.

특히 소작농은 자작농에 비해 산출물의 거의 반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중의 불리함에 놓여 있다. 1922년 전남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 자녀가 있는 호수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호수는 지주와 자작농이 각각 70%와 9%임에 비해 소작농은 1.8%에 불과하였다(전라남도, 『조선관행조사서』 1923: 117) 이러한 사

실은 거꾸로 지대율을 낮추는 소작개혁(tenancy reform)이나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land reform)이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토지를 담보로 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취학률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Deininger and Olinto(2001)는 필리핀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된 이후 수혜계층 자녀들의 교육 년수가 비수혜계층의 자녀보다 평균 0.6년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도의 경험도 필리핀과 비슷한데, Deininger et al.(2009)에 따르면, 토지개혁으로 인해 1세대 자녀들의 교육년수는 평균 0.3년 증가하였으며, 2세대에서는 1년 이상 늘어났다. 이와 반대로 Albertus et al.(2020)은 페루를 대상으로 농지개혁 실시이후 교육 년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취학률의 증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을까? 이것이 이 논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과제이다.

취학의 결정에는 아이와 부모의 특성뿐 아니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지방마다 서로 다른 산업화의 차이가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적'(skill intensive)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조업의 노동력은 시간 준수 등 엄격한 규율 뿐 아니라 일정 정도의 문자(literacy)와 수리( numeracy)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것은 제조업의 발달이 그 지역 숙련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학교 참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외 노동시장의 활성화는 농가 부수입을 증가시켜 소득 효과를 통해 취학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의 발달은 지방 재정 수입의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학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사고'(modern outlook)를 확산시켜 미취학 아동의 학교 참여를 고무할 수도 있다(Inkeles and Smith, 1974) 그러나 농외 취업기회의 확대가 '학력 프리미엄'(w2-w1)뿐 아니라 취학에 따른 기회비용 w1도 함께 증가시킴으로써 취학 대신에 취업을 유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1990년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Le Bru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공업화가 학교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90년대 멕시코 도시를 대상으로 한 Duryea(2003)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오히려 취학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규(1988)와 안병직(1989)은 1930년대 조선의 높은 '교육열'을 같은

시기의 식민지공업화의 확대와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즉 이 두 연구는 산업화의 상반된 두 효과 중에서 취업보다는 취학을 보다 많이 유도하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차명수(2014: 268-69)는 일제시기 제조업의 발달이 취학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관습과 종교의 차이도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cker and Woessman(2009)은 19세기 프러시아에서 신교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초등학교취학률과 문해율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Gallego and Woodberry(2010)와 Acemoglu et al.(2014)에 따르면, 20세기 초 서양의 선교사가 많이 파견된 지역일수록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오늘날까지도 학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경을 읽기 위한 노력이 개신교도들의 문해율과 취학률이 높은 주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동아시아에서의 유교도 배움과 교육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이러한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Choo, 1985; de Bary, 1996). 조선후기에는 대략 4~5마을에 1개의 서당이 있을 정도로 서당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습득하기 쉬운 한글의 보급 덕분으로 식민 통치 이전에 이미 교육의 보급은 세계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민지시기 혹은 해방 이후까지도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Kim and Leipziger, 1993; Lee, 1997). 이들 반론에 따르면, 기술과 실용 대신에 중국 고전 중심의 유교 교육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소수의 양반 계층에게만 '학력 프리미엄'을 가져다 줄 뿐, 일반 상민들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sup>1)</sup> 일반인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유교의 영향이 아

1) 193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의 문해율은 22% 정도였다. 이 중 한글만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은 15.4%(남자 25.4, 여자 6.2%)에 불과했으며, 6세 이상의 인구로 좁혀도 그 수치는 20%를 넘지 못하였다(노영택, 1994).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치는 더 낮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차명수(2014: 251)는 1910년 15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문해율을 18.9%(남자 34.1%, 여성 3.6%)로 추정하였다. Dore(1965)에 따르면, 19세기 중엽 일본의 성인 문해율은 남자가 50%, 여자는 15%였으며, 같은 시기 중국의 경우 Rawski(1979)는 각각

나라 소수 양반계층의 전유물인 과거시험이 폐지되고,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하게 된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상민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 내용도 외국어와 수리 과목이지 공자와 맹자와 같은 유교 경전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김부자(2008)는 “취업 후 요구되는 것은 첫째로 국어(일본어), 둘째로 주산, 셋째로 쓰기”라는 부산의 어느 일본인 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어 습득이 조선인의 주요한 취학 동기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반론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면, 유교적 세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근대 교육을 통해 비로소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된 일반 상민층에서 오히려 교육의 참여 열기가 더 높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토지소유의 편중이 취학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의 공급과 재정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는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920년부터 지방정부(府, 郡, 島)는 ‘학교비’라는 이름으로 학교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학교 신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학교비로부터 조달하였다(박기주, 2012; 최병택, 2013). 또한 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 설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설립 구역 내 조선인이 부담한다”(1911년 10월 18일, 『공립보통학교비용령』)는 이른바 ‘지방분임주의’를 내세워, 지방 정부로 하여금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학교 재정에 필요한 재산세(호세, 가옥세부과금, 지세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학교의 신설에 필요한 교부금을 지방 정부에 내려보낼 때도 지방민의 보다 많은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해 ‘매칭펀드’ 방식을 활용하였다. 『지방재정요람』에 따르면, 1924~38년간 학교건축비 중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47%를 차지하였다(오성철, 2000: 107의 표3-2). 박진동(1998)은 일제 시기 신설된 상당수의 공립학교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즉 취학의 결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공급과 운영은 그 지역 주민들의

---

37%와 6%로 추정하였다. Allen(2003)에 따르면, 1800년 경 영국과 네덜란드의 성인 문해율은 각각 53%, 68%였으며 이태리와 스페인이 가장 낮은 22%와 20%를 기록하였다. 서당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누구나 손쉽게 글을 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해율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일반 상민의 교육 프리미엄(w2-w1)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음을 시사해준다.

공공선택(public choice)에 의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세금에 의존하는 공교육(tax-financed mass schooling)의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간에도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와 학교를 졸업한 자녀의 부모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계층별로도 재산이 없어 세금을 적게 내는 빈농들은 공교육의 확대를 지지하지만, 세금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자산가들은 이에 반대할 수 있다. 자산가들 중에서도 자본가(industrial elites)들은 공교육의 확대에 우호적인 반면, 지주들(landed elites)은 이에 반대할 수도 있다. Bowles(1978)와 Galor et al.(2009)는 그 이유를 학교를 졸업한 숙련노동자들이 제조업을 쫓아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2)</sup> 조선총독부의 한 사례 조사에 따르면, 1930년대 구직을 위해 농촌을 떠난 남자 중에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36%임에 비해 남아 있는 남자 중 초등학교 졸업 이상은 9.6%에 불과하였다(조선총독부, 『농촌인구이동조사』 『조선총독부조사월보』 15-10, 1944. 12).

이처럼 지역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예산 배분과 학교의 신설 여부는 결국 각 지역정치(local politics)의 장에서 ‘파워게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최종 결과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예컨대 주민 모두가 동등한 1표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토지소유가 편중된 지역일수록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따라 하위 계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참정권이 일부 고액 납세자에게만 주어지거나 지역정치가 대토지소유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면, 다수의 희망과 상관없이 소수 지방 토호들의 선호가 관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ngerman and Sokoloff(2000; 2002)과 Engerman et al.(2009)는 남미가 북미에 비해 오늘날까지도 교육 수준이 낮은 이유를 지역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지주 엘리트들이 공교육 확산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Galor et al.(2009)와 Ramcharan(2010)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기 미국을 대상으로 토지 불평등이 심한 지역일수록 일인당 교육비 지출도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Go

2) Galor et al.(2009)는 인적자본과 토지 간의 낮은 보완성(low degree of complementarity between human capital and land)을 지주가 공교육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Sun and Lindert(2010)는 19세기 미국을 대상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학률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Cinnirella and Hornung(2016)와 Goni(2018)는 각각 19세기 영국과 프러시아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의 편중과 취학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Baten and Juif(2014)은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19세기 토지소유가 편중된 나라일수록 오늘날까지도 교육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농지개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뿐 아니라 공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되어온 지주들을 제거하는 부수적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특히 Galor et al.(2009: 164-65)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지주의 공교육 반대를 무력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해방 이후 교육예산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학교 공급과 취학률도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농지개혁을 인해 지주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불평등과 취학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발견된다고 해서 이것이 지주 엘리트들의 공교육의 반대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토지 불평등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곤계층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학교 참여가 저조한데 따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편중이 극심한 지역은 세금원(tax base)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불평등도와 일인당 교육 지출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지주가 반대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취학률도 높다고 해서 이를 일반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voice)이 커진 결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투표참여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취학률이 높은 이유가 높은 소득수준 때문인지 일반 대중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실제 지주 엘리트들이 공교육 확산을 저지하였는지를 검증하려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변수, 예컨대 학교 공급과 토지 불평등 사이에 음(-)의 관계가 발견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Cinnirella and Hornung(2016)를 제외한 많은 연구는 지주의 직접 통

3) 예컨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소득수준과 투표율의 관계를 보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 비해 투표율이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국의 대선 투표에서는 두 계층 사이에 32% 격차가 났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

제 범위 밖에 있는 취학률과 토지불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sup>4)</sup> Acemoglu et al.(2008)는 콜롬비아(Cundinamarca, Colombia)를 대상으로 19세기 토지의 불평등도와 20세기 후반의 중등학교취학률 간에 양(+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지주계급이 공교육을 반대한다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Dell(2010)은 페루의 스페인 식민지시절 mita(광산 강제노역제도, 1569~1825)가 시행된 지역이 오늘날까지도 교육과 생활수준이 낮은 이유가 지주계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주계급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경제력이 있는 지주계급이 정치 엘리트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였거나(Acemoglu et al., 2008) 정치권력에 대한 로비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재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Dell, 2010)이라고 설명한다.

일제시기는 토지소유의 편중이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하였으며(식민지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김낙년, 2013), 지역정치가 로컬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는 점(동선희, 2011)으로 미루어 볼 때, 지주계급이 공교육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공교육의 확대를 반대했거나 혹은 실력으로 이를 저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실증결과들은 일제시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립학교 설립운동에 이들이 지역유지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진동, 1998; 오성철, 2000; 임삼조, 2006). 그렇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가? 지주들은 계급적 이익에 따라 공교육에 확대에 반대하였는가 아니면 신망 받는 지역유지로서 오히려 공교육 확대를 지지하였나? 이 점이 농지개혁이 취학률에 미친 효과를 살펴볼 때 눈여겨볼 또 하나의 쟁점이다.

4) 19세기 영국을 대상으로 한 Cinnirella and Hornung(2016)에 따르면, 취학률과 토지불평등 사이에는 (-)의 관계가 있었지만 학교공급수와 토지불평등도 간에는 아무런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학교의 질을 나타내는 교사/학생비율은 오히려 토지편중이 심한 지역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자 료

한국의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본 논문이 살펴보는 지역은 도시(부산, 마산, 대구)와 섬(울릉)을 제외한 경상도 40개 군이며,<sup>5)</sup> 시기는 1938/39년부터 1955/56년까지이다.<sup>6)</sup> 지역을 영남지방으로 한정 한 것은 군 레벨에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 지역 외에서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제 시기는 취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취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총독부가 정해놓은 입학정원수보다 지원자가 늘 많아,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데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초등학교취학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취학률, 즉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수요 개념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아니라 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그 숫자가 결정된 절단된(censored) 초등학교 취학률이다. 이 둘을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흔히 좌변에 초등학교 취학률을 놓고 우변에 취학률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 예컨대 소득수준, 소작지율 등을 포함시키는 모형은 입학쿼터제가 실시된 일제시대를 대상으로는 좋은 추정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또한 추정결과 해석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총독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정책변수를 좌변에 두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부모의 소득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난센스일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5) 도시와 섬을 제외하면 모두 41개 군이지만, 함양군의 입학지원자 수치에 오기가 있어 샘플에서 함양군을 제외하였다. 원 자료인 『도세일반』에는 함양군의 초등학교 합격자 숫자가 1,061명(남790, 여 271)인데 비해, 지원자는 60명(남 57, 여3)으로 되어 있다. 지원자 수치 중에 천 단위 숫자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잘못된 수치가 합산과정에서도 수정되지 않아 실제 지원자 숫자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게 되었다. 혹시 지원자가 실제로 60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1936년도 지원자 숫자와 비교하였는데 1936년에는 합격자가 703명이며 지원자는 이 보다 2배 많은 1471명으로 되어 있다(조선시보사, 『경남년감』(1937), p.262). 3년 만에 지원자가 갑자기 줄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939년 지원자 숫자 60명은 오기로 판단된다.

6) 195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군이 시로 분리되었는데, 일제시기 시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였다. 포항+ 영일->영일, 경주+월성->경주, 김천+금릉->김천, 충무+통영+거제->통영, 진해+ 창원->창원, 삼천포+ 사천->사천.

〈표 1〉 주요 기술 통계량(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1938/39				1955/56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 편차	최저	최고
전체취학률, 1938(%)	27.03	3.88	21	41.09	81.42	8.24	62.01	96.57
경쟁률, 1939	1.85	0.4	1.12	2.75				
남	1.70	0.31	1.13	2.55				
녀	1.52	0.26	0.80	1.99				
지원기준취학률, 1939	70.64	14.14	43.14	100.24				
입학기준취학률, 1939	42.81	5.54	31.81	54.04				
소작지율, 1938	0.59	0.1	0.25	0.75	0.05			
소작지율(답),	0.62	0.1	0.31	0.77				
소작지율(전)	0.54	0.11	0.13	0.72				
학교밀도, 1937	0.95	0.36	0.35	1.96	2.59	0.93	1.22	6.3
공장밀도, 1937	0.19	0.21	0.02	1.25	0.15	0.19	0	1.28
쌀생산성, 1938	1.47	0.26	0.77	2.13	1.27	0.26	0.71	1.66
인구(명)	103,667	3749	40,582	180,739	132,925	52,877	49,337	238,275
양반비율(%), 1907	3.48	9.39	0.06	44.57				
대과급제자비율(%)	0.77	0.77	0	2.8				

출처: 주 7) 참조.

Source: see footnote 7.

더구나 해방 이후부터는 입학쿼터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방이후 취학률은 일제시대 취학률과 그 성격이 달라졌다. 전자가 총독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 변수라면, 후자는 부모들의 수요가 반영된, 진정한 의미에서 초등학교 취학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이 해방 전이나 그 후나 초등학교 취학률로 같다고 해서 이 두 수치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농지개혁이 취학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해방 이후 취학률의 급증을 해방에 따른 기대감이나 농지개혁의 효과와 직접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그것인데, 이러한 설명은 흔히 해방직후 입시쿼터제의 폐지에 따른 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총독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 취학률이 아니라 일제시기 부모들이 원했던 수요 차원의 취학률을 해방 이후 취학률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가 아는 한 일제시대에 수요 개념의 초등학교취학률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경쟁률 지표 밖에 없다. 경쟁률은 정의상 지원자수 대비 합격자수이기 때문에 지원자수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수요 개념의 초등학교 취학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가 여러 자

료를 뒤져본 바에 따르면, 각 군별 레벨에서 지원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은 영남 지방 이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이 분석 단위를 이 지역으로 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시기의 선정 역시 자료적 제약 때문이다. 1938/39년은 해방 이전 시기 중에서 1945년에 가장 가까운 연도 중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년도이며, 1955년을 선택한 것은 1950년대 말에 가까워지면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 실제 농지개혁이 취학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더욱이 1957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경북의 일부 군의 경계가 조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표 1〉은 1938/39년과 1955/56년 두 시점에서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그 취학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의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sup>7)</sup> 〈표 1〉에서의 전체 취학률은 입시경쟁을 통해 합격한 재학생수를 전체 인구수에서 취학연령의 인구구성비 16.4%(古川宣子, 1990)로 나눈 값으로, 초등학교취학률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하 후술하는 다른 기준의 두 취학률과 구별하기 위해 전체 취학률로 부르기로 한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38년 현재 경상도 40개 군의 평균 취학률은 27%에 불과하였지만 1955년에는 그 수치가 81%로 증가하였다. 즉 17년간 약 3.01배(=81.42/27.03) 증가한 것이다. Clemens(2004: 42)는 129개 나라를 대상으로 1960~2000년간 취학률의 전환 속도(transition speed)를 추정하였는데, 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5%에서 80%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50년 이상이 걸렸다. 즉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평균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7) 〈표 1〉에서 1939년 지원자수와 합격자수, 학교수, 인구, 면적, 쌀 생산량, 소작지율은 각각 경상북도와 경상남도편, 『도세일반』(1939년)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면적은 자료에 평리로 되어 있는 것을 km<sup>2</sup>로 환산하였다. 1938년과 1955/56년 전체 재학생수는 『지방재정요람』과 『도세일반』에서 구할 수 있으며, 1955년 소작지율은 Rudolf(2012)의 추정치이다. 공장수의 출전은 1937년의 경우 『조선공장명부』(1937년판)이며, 1955년은 한국은행조사부, 『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1956)에서 가져왔다. 양반 호수와 충호수는 이현창(1997),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과급제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져왔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처럼 비교적 단시간 내에 취학률을 빨리 증가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즉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입시제도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식민지 시기에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입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입학 정원수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초기 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입시 경쟁을 치러야 했다(古川宣子, 1990; 오성철, 2000: 151). 특히 1930년대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졌는데, <표 1>에 따르면 1939년 현재 경상도 지역에서의 평균 경쟁률(=지원자수/합격자수)은 1.85: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합천이 1.12:1로 가장 낮으며 가장 높은 군은 경북 경산(2.75:1)이었다. 그리고 남녀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쟁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 만일 총독부가 일본이나 식민지 대만에서처럼 학교 가기를 희망하는 아이를 시험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면 그 때 취학률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계산한 것이 지원 기준 취학률이다. 지원기준 취학률은 입학 지원자를 취학법정연령에 도달한 6세 아이 인구수<sup>8)</sup>로 나눈 값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39년 현재 지원기준 취학률은 입학자 기준의 취학률(=합격자수/6세 아이 인구수) 42.8%에 비해서는 약 1.65배, 전체 취학률에 비해서는 약 2.6배 높은 70.64%로 계산되었으며, 후술하듯이 남자는 6세 기준으로 이미 100%를 넘어섰다. 古川宣子(1990)는 같은 방법으로 1939년도 경기도 취학률을 계산하였는데 그 수치는 약 67%였으며,<sup>9)</sup> 남자의 경우는 경상도와 마찬가지로 100%를 넘어섰다. 오성철(2000: 152)은 좀 더 과감하게 모든 초등학교가 6년제이며 중도 탈락자가 없다고 가정하여 지원자 기준의 6년 취학률을 추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1940년 현재 실제 취학률 42%보다 1.6배 정도 높은 67.3%로 계산되었다. 요약하면,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높은 교육수요(교육열)를 총독부가 정원제한과 입학시험을 통해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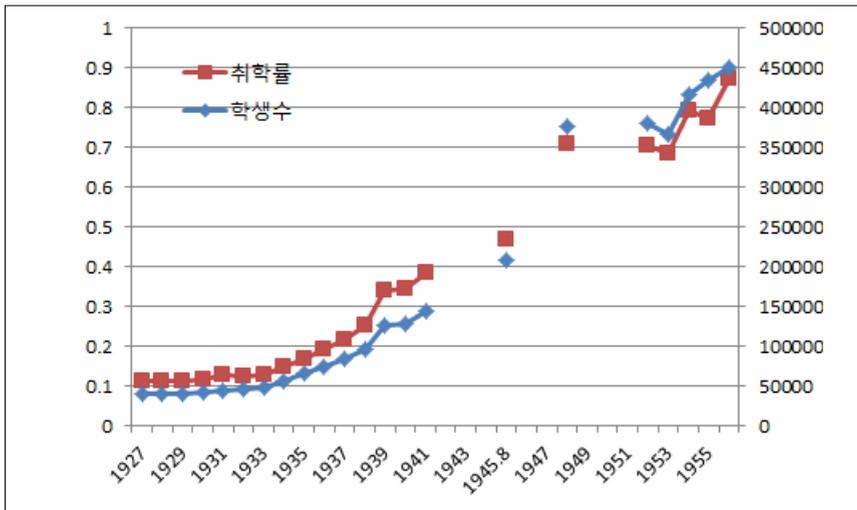
학부모와 여론의 거센 폐지 압력을 받아온 입학시험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비로소 폐지되었다. 미군정은 1945.9.27일 「교육에 관한

8) 이 비율 역시 1944년 조사에 근거하여 인구수에 2.48%를 곱한 古川宣子(1990)를 따랐다.

9) 古川宣子(1990)의 수치는 간이학교 학생수가 빠져 있는 반면, 위 <표 1>에는 이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경상도는 경기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았을 것이다.

조치』(미군정 법령 제6호)를 공포하여 6~11세의 취학연령아동의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곧이어 1946년부터는 만 6세 아동은 전부를, 만 7세~11세까지의 적령 초과 미취학아동은 지망자 전부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오천석, 1964, 1972; 손인수, 1992: 247) 이러한 입학시험의 폐지가 취학률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 경상북도 초등학교 취학률과 학생수의 추이, 1927~57(Trend in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and number of students, 1927~57)



출처: 본 논문 주 10) 참조.  
Source: see footnote 10.

〈그림 1〉은 1927~1957년간 자료가 남아 있는 경북지방의 취학률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써, 1938년의 28%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1955년의 81%에 도달하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해방 직후의 취학률은 정확한 인구수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수의 추이도 함께 그렸다.<sup>10)</sup> 이 그림에 따르면, 1938년 이후에도 학

10) 〈그림 1〉에서 학생수의 경우 1927~1941년은 『지방재정요람』, 1945년 이후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경북교육사료』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인구는 1928~41년간에는 『조선총독부통계년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52년 이후는 『도세일반(람)』에서 구할 수 있다. 단 1945년과 48년은 1950년대 전국 인구에서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율 16%를 가정하여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림 1〉에서 1945년 이후는 대구와 울릉군이 포함되어 있다.

생수와 취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8.15 해방 당시 취학률은 47%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증가 속도가 해방 이후부터 갑자기 가팔려져 1948년에는 70%에 도달하였다. 3년 만에 23%가 증가한 것이다. 1949~50년에는 데이터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속도라면 1950년대 초에는 80%를 넘어섰을 것이다. 1946년 이후부터 늘어난 학생수가 1948년에는 3학년까지만 반영되었지만, 1951년이 되면 6학년까지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그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전쟁의 충격으로 취학률은 다시 7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하여 1955년 무렵에야 다시 80% 초반으로 회복하였다. 만일 한국전쟁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없었다면 1955년 무렵에는 취학률이 80% 후반 혹은 90%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요약하면 1938~55년간 취학률 3배의 급증(1945~55년 기준으로는 1.73배)에는 이처럼 입학시험의 폐지를 계기로 식민지시기에 '억눌려 있던 교육수요'(pent-up demand for schooling)가 폭발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은 틀림이 없다.

취학률 상승을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유력한 후보는 농지개혁이다. 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고 2달 뒤인 5월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김성보, 2001; 정병준, 2003), 농지개혁(land reform)의 범주 속에 소작개혁(tenancy reform)까지 포함시키면, 농지개혁은 미군정이 1945년 10월 5일 「최고소작료결정의 건」(1945.10.5. 미군정법령 제9호)을 공포할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은 이 법령을 통해 “최고 3분의 1을 상회하는 소작료 계약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소정의 최고 소작료에서 1할을 감하고 납입한다”(제5조)고 발표하였다. 답의 평균 소작료율을 50%라고 하면, 이 조치로 인해 소작농은 1945년 가을부터 평균 17%의 소득상승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어서 미군정은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3월,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토지 중 약 20만 정보를 미리 농민에게 매각해버렸다(김성호 외, 1989: 383). 만의 하나,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채기를 박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주의 사전 매매가 러시를 이루었는데(홍성찬, 1992), 한 통계에 따르면 1945년 2월말 65% 수준의 소작지의 비율이 1949년 말에 이미 그 1/2수준인 33%까지 떨어졌다(김성호 외, 1989: 1029). 요약하면, 농지개혁이 해방 이후 초등

학교 취학률의 상승에 기여하였다면, 그것은 1950년 5월 이승만 정부에 의해 단행된 '원 포인트 농지분배'(one-time redistribution)의 효과뿐 아니라 미군정의 소작료 1/3제 실시와 귀속농지 매각, 지주의 사전 방매 등 일련의 여러 조치가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1938년 경상도 40개 군의 평균 소작지율은 약 59%였으며, 답은 이보다 조금 높은 62%였다. 그러나 최저 남해의 25%에서 최고 김해의 75%까지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55년의 소작지율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전국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38~55년간 취학률 상승을 견인한 또 다른 후보로 학교공급의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 古川宣子(1990)는 1911년 '공립보통학교 아동 통학구역 조사'를 바탕으로 식민지시기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4km 내외로 파악한 바 있다. <표 1>에 제시된 학교밀도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주민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1939년 현재 4km 이내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민의 평균 비율은 0.96이었지만, 1955년에는 그 수치가 2.56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39년에는 지역 간의 격차가 최하 0.35(봉화)에서 최고 1.96(남해)이었지만, 1955년에는 최저가 1.22에 달해 경상도 전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4km 이내에 있는 학교에 걸어서 통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학거리의 단축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Glick, 2008; Lloyd et al., 2007; Handa, 2002), 남학생보다는 특히 여학생의 취학률 상승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취학률 상승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농촌공업화이다. 그동안 몇몇 연구에서는 공업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변수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농업인구의 비율을 사용하였지만, 비농업인구 중에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구, 예컨대 어업종사자나 실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장수를 인구수로 나눈 공장밀도를 공업화의 대변수로 사용한다.<sup>11)</sup> <표 1>에서 1937년의 수치는 『조선공장명부』에서 얻은 것이며 1955년은 한국은행(1956),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조선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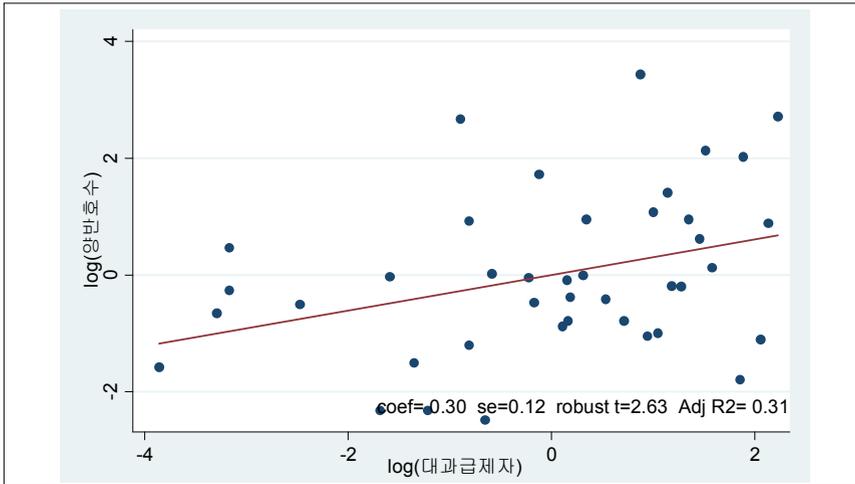
11) 공장의 설립이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어느 정도가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937년 기준 공장밀도를 사용하였다.

명부』에서의 공장은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1955년 자료에는 10인 이상의 공장만 수록되어 있어, 직접 비교하는 데는 난점이 따른다. 그렇지만 1937년 공장수를 모두 10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40개 군 중 16개 군에서 공장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1937~55년간 평균 공장밀도는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었다.<sup>12)</sup> 물론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공업화의 진전이 취학을 고무하였는지 아니면 취학 대신에 취업을 유도하였는지는 선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민지시기를 대상으로 한 차명수(2014)의 연구결과가 이 시기에도 적용된다면 1938~55년간 농촌공업화의 진전은 이 시기 취학률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의 변화 역시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1938~55년간 농가소득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성을 대변수로 사용하였다. 일제시기에는 가을 추수기 작황이 이듬해 취학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며 또 중요한 환금작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1938~55년간 단보당 생산량은 해방 이후 비료 등의 자재 부족으로 인해 1.47석에서 1.27석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쌀 생산성의 하락이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면, 이는 취학률의 증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변화 역시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표 1>에 따르면 1938~55년간 인구는 1.2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는 6~11세의 취학연령인구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는 일인당 교육비의 부담을 증가시켜 취학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박기주, 2012; 차명수, 2014).

12) 『조선공장명부』에는 공장의 규모를 직공수를 기준으로 ABCD로 구분하고 있으며, 1955년 자료에는 구체적인 직공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장개수 뿐 아니라 직공수의 차이를 고려한 공장밀도도 계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지표를 사용하든 취학률에 미친 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2〉 양반호수와 대과 급제자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households of Yangban class and successful candidates of Civil Examination)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유교적 영향과 취학을 간의 관계이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속에 남아 있는 잔재까지 없애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만갑(1960)은 1950년대 농촌 현장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사회의식 속에 여전히 班常의 문화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1950년대까지 남아 있던 유교적 관습의 지역적 차이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양반 호 비율과 대과급제자비율을 대변수로 사용하였다. 양반 호 비율은 1909년의 『민적통계표』에 나타난 양반과 유학 호수를 전체 호수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대과급제자의 비율은 조선시대 대과급제자 15,151명중 경상도에 본관을 둔 2,396명을 1909년의 호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영남 40개 군의 양반호의 평균 비율은 3.4% 정도였지만, 지역별로는 최저 0.06%에서 최고 45%의 비교적 큰 편차가 있다. 대과급제자비율역시 평균은 0.77명이지만, 여기에도 편차가 있어 호당 2.8명을 배출한 군이 있는 반면 0.01명을 배출한 지역도 있다.

그런데 『민적통계표』는 조선시대 양반의 비율을 읍면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지만, 전국 평균이 2.6%에 불과하여 이 지표가 조선시대의 양반비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조선시대 호적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양반호의 비율은 작게는 39%

많게는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전형택, 1995: 14-16). 그러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유학의 대부분이 군역과 직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재된 이른바 ‘冒稱幼學’ 즉 서류상의 양반들에 불과하며, 실제 양반의 까다로운 조건(宮嶋博史, 1996)을 모두 갖추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양반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송준호, 1987). 본관 기준의 과거급제자비율 역시 반촌과 상민촌을 구별하는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이씨의 과거급제자 하더라도 모두가 경주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지표 모두 의심을 받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양자 간에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것이다. 서로 다른 계통에서 얻은 지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두 지표 모두 일정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가 바로 이를 그린 것인데, 이 그림에 따르면 양자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따라서 이 두 지표는 비록 측정오차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식민지 시기 班常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유용하다고 판단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1938~55년 취학률의 상승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의 폐지, 농지개혁의 실시, 학교공급의 증가, 농촌공업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지개혁의 실시가 취학률에 미친 순효과(partial effect)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회귀분석의 방법이 요구된다.

## IV. 실증결과

### 1. 모형

농지개혁이 초등학교취학률의 증가에 미친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3) 추정식은  $\ln(\text{양반호수}) = a_0 + a_1 \ln(\text{대과급제자수}) + a_2(\text{도 더미})$ 이며, <그림 2>는 여기에서 도별 더미를 통제한 뒤 그린 것이다.

$$\Delta \ln(y_i) = \beta_0 + \beta_1 \ln(R_{i,t-1}) + \Phi \Sigma X_i + e_i \quad (1)$$

하첨자  $i$ 는 지역(郡)을 나타내며, 종속변수  $\Delta \ln(y)$ 는 로그를 취한 1955/56년의 취학률에서 로그를 취한 1938/39년 취학률을 뺀 차분 값(differenced variable)이다. 설명변수  $\ln(R_{t-1})$ 은 로그를 취한 1938년도 소작지율이며,  $X$ 는 취학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통제변수들의 집합이다. 통제변수에는 2절에서 살펴본  $\Delta$ 학교밀도,  $\Delta$ 공장밀도,  $\Delta$ 미곡생산성,  $\Delta$ 인구 등 차분변수와 초기시점에서의 취학률과 양반호비율 및 대과급제자비율 등 레벨변수가 포함된다. 또한 각 군별 지리적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답작비율도 포함시켰다.  $\Delta$ 공장밀도는 1937년과 1955년間に 공장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분 값 대신에 공장밀도 $_t$ /공장밀도 $_{t-1}$ 로 대체한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38년 경쟁률도 통제변수에 포함시킨다.

1938~55년 사이에는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의 제도적 충격이 있었다.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이고 나머지 하나가 입학시험의 폐지이다. 우리는 앞에서 미군정의 무시험·무제한 입학 허용을 계기로 식민지 시기 억눌려 있던 초과수요(pent-up demand for schooling)가 일거에 분출하였으며, 이것이 해방이후 취학률을 가파르게 상승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이 제도 변화에 따른 취학률 증가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통제변수의 집합에 경쟁률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경쟁률은 정의상 정원 대비 지원자수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초과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시제도의 철폐가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면, 초과수요가 많았던 지역 즉 과거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입학규제가 폐지된 이후 과거에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다면, 미군정의 입학시험 철폐가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 모형에서 주된 관심은  $\beta_1$ 의 부호이다. 우리는 앞의 <표 1>을 통해 경상도 내에서도 소작지율 간에 작지 않은 편차(평균 0.59, 최저 0.25, 최고 0.7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만일 농지개혁이 소

작농가의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면, 농지개혁의 직접적 수혜 대상인 소작농이 많은 곳 또는 소작농에게 분배된 농지가 많은 지역, 즉 소작지율이 높은 지역의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즉 농지개혁이 소작농의 취학률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beta_1$ 의 부호는 (+)가 예상된다. 또한 농지개혁이 취학률을 증가시킨 경로가 소득 효과와 차입제약의 완화였다면, 답의 소작지율이 높은 지역이 전의 소작지율이 높은 지역보다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을 것이다. 논이 밭보다 평균적으로 지대율과 농지가격 모두 높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밭보다는 논을 분배 받은 소작농의 소득 및 자산 효과가 더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모형 (1)에서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된 뒤에도  $\beta_1$ 의 부호가 (+)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답 소작지율을 사용하였을 때의 계수값이 전 소작지율을 사용하였을 때의 계수값보다 크다면, 우리는 한국의 농지개혁이 소득효과를 통해 취학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2. 추정결과

### (1) 농지개혁이 취학률 증가에 미친 순효과(partial effect)

식 (1)의 추정결과는 <표 2>에서 정리하였다. 식 (1)~(3)은 <표 1>에서 살펴 본 1938/39년 세 가지 취학률 중 전체 취학률을 사용한 추정결과이며, 식 (4)~(6)과 식 (7)~(9)는 각각 입학자 기준과 지원자 기준 취학률을 사용한 추정결과이다. 또 각각에 대해 전체 소작지율 외에 답과 전의 소작지율을 이용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양호한 편으로, 소작지율과 나머지 통제변수들이 피설명변수  $\Delta \ln(y)$ 를 82~90%까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대로 경쟁률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느 기준의 취학률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추정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작지율부터 살펴보면, 식 (1)~(9) 모두 1% 유의수준(t통계량 5.72~7.44)에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또한 답과 전의

〈표 2〉 추정결과: 취학을 증가의 결정요인, 1938/9~1955/6(Factors affecting increase in primary enrollment rates, 1938/9~1955/6)

종속변수: $\Delta \ln(y) = \ln(\text{취학률} 1955/56) - \ln(\text{취학률} 1938/9)$									
취학률기준	전체 취학률(1938)			입학자기준 취학률(1939)			지원자 기준 취학률(1939)		
식	1	2	3	4	5	6	7	8	9
$\ln(\text{소작지율})$ 1938	0.38*** (6.80)			0.39*** (6.76)			0.35*** (5.46)		
$\ln(\text{소작지율})$ 답 1938	0.42*** (5.42)			0.44*** (5.76)			0.40*** (4.90)		
$\ln(\text{소작지율})$ 전	0.26*** (6.62)			0.26*** (6.31)			0.24*** (5.30)		
$\ln$ 취학률 1938/9	-0.76*** (-10.47)	-0.76*** (-9.37)	-0.76*** (-11.67)	-0.81*** (-9.26)	-0.81*** (-9.07)	-0.81*** (-9.27)	-0.75*** (-7.83)	-0.75*** (-7.84)	-0.75*** (-7.99)
$\Delta$ 학교밀도 1938/9~55	0.09*** (4.82)	0.08*** (3.90)	0.10*** (4.64)	0.08*** (4.20)	0.08*** (3.39)	0.09*** (4.11)	0.08*** (3.79)	0.07*** (3.21)	0.08*** (3.77)
$\Delta \ln(\text{공장밀도})$ 1937~55	0.05*** (3.70)	0.05*** (3.60)	0.05*** (3.52)	0.06*** (3.54)	0.06*** (3.56)	0.06*** (3.33)	0.06*** (3.54)	0.06*** (3.59)	0.06*** (3.45)
$\Delta$ 쌀생산성 1938~54	-0.04 (-1.18)	-0.04 (-1.33)	-0.03 (-0.85)	-0.04 (-1.12)	-0.05 (-1.34)	-0.03 (-0.78)	-0.01 (-0.16)	-0.02 (-0.40)	0.00 (0.11)
$\Delta \ln$ 인구 1938~54	-0.13 (-1.34)	-0.12 (-1.12)	-0.13 (-1.28)	-0.20** (-2.15)	-0.19** (-1.93)	-0.19** (-2.04)	-0.20** (-2.07)	-0.19** (-1.92)	-0.19** (-1.99)
$\ln$ 경쟁률(남) 1939	0.43*** (7.27)	0.43*** (6.34)	0.38*** (6.62)	0.45*** (6.25)	0.46*** (5.80)	0.40*** (5.85)	0.20** (2.07)	0.21*** (2.18)	0.16* (1.78)
$\ln$ 경쟁률(여) 1939	-0.02 (-0.33)	-0.02 (-0.39)	-0.00 (-0.01)	-0.00 (-0.11)	-0.01 (-0.18)	0.01 (0.15)	-0.09 (-1.40)	-0.09 (-1.41)	-0.08 (-1.22)
양반호비용 1909	-0.47*** (-3.38)	-0.48*** (-3.48)	-0.41*** (-3.48)	-0.47*** (-3.39)	-0.49*** (-3.50)	-0.42*** (-3.47)	-0.51*** (-3.85)	-0.52*** (-3.97)	-0.46*** (-3.97)
$\ln$ 대과급제 비용	-0.03*** (-3.15)	-0.02** (-2.50)	-0.03*** (-3.97)	-0.02*** (-2.76)	-0.02** (-2.18)	-0.03*** (-3.46)	-0.02** (-2.40)	-0.02* (-1.95)	-0.03*** (-3.01)
답작비용 1938	-0.44*** (-3.81)	-0.45*** (-3.89)	-0.32*** (-2.80)	-0.39*** (-3.17)	-0.43*** (-3.34)	-0.27** (-2.17)	-0.31** (-2.36)	-0.35*** (-2.59)	-0.20 (-1.58)
도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 <sup>2</sup>	0.84	0.83	0.84	0.84	0.82	0.83	0.90	0.89	0.90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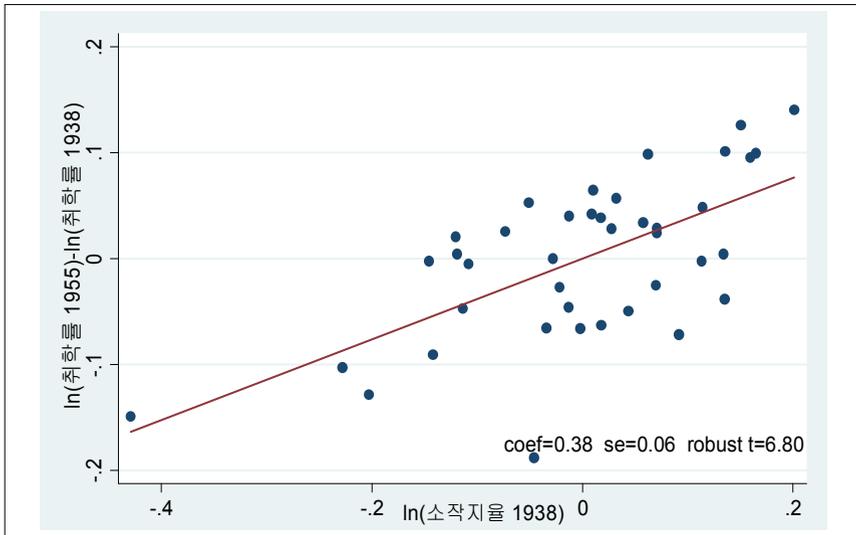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는 denotes 1%, 5%, 10% level, respectively.

계수 값을 비교하면, 밭보다는 논을 분배받은 소작농가의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지개혁이 소작농의 취학률을 상승시킨 경로가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였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sup>14)</sup>

〈그림 3〉은 식 (1)을 이용하여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뒤 소작지율(1938)과 취학을 변화(1938~55)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양자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일부 이상치(outlier)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의 추정결과도 흥미롭다. 예상대로 〈표 2〉는 학교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지역일수록 그리고 농촌공업화의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취학률의 상승폭도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미곡생산성은 취학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곡생산성이 농가 소득을 보여주는 대변수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쌀 생산성의 하락이 취학률의 빠른 상승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림 3〉 초등학교 취학을 증가와 소작지율(1938)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and ratio of tenanted land in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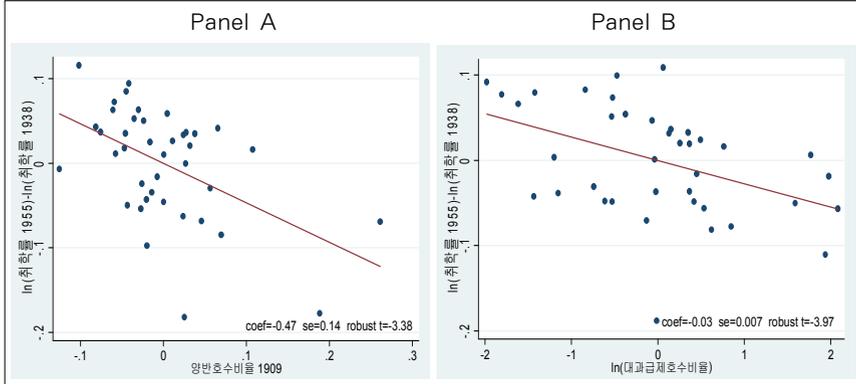
14) 본 논문 부록의 〈부표 1〉은 〈표 2〉에 나타난 답과 전의 소작지율 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작지율 대신에 전소작지율 대비 답소작지율을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기준의 취학률을 이용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 구별 없이, '답소작지율/전소작지율'의 계수값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경쟁률의 추정결과도 눈길을 끈다. <표 2>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쟁률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쟁률은 1%~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미군정의 무시험, 무제한 입학허용 조치가 취학률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을 것이란 필자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추정 결과이다. 그런데 식 (7)~(9)를 식 (1)~(3)과 식 (4)~식 (6)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식 (7)~(9)의 계수 값이 작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식 (7)~(9)의 취학률이 실제 취학률이 아니라 지원자들을 모두 합격시킨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취학률이란 점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률이 이미 취학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의 폐지가 취학률 상승에 미친 효과가 작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수 값이 작은 것은 이러한 이유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원자 기준의 취학률이 각 지역의 수요 취학률을

정확히 반영하였다면 계수 값은 제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록 절대값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경쟁률의 계수가 여전히 (+)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선인의 취학에 대한 실제 수요가 지원기준 취학률보다 더 컸음을 시사해준다. 입학시험과 높은 경쟁률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학원서를 내기도 전에 스스로 취학을 포기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통제변수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양반비율과 대과급제자비율이다. <표 2>의 추정결과는 이들 두 변수와 종속변수인 취학률증가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양반계층보다는 근대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일반 상민층에서 학교의 참여 열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 추정결과가 암시해주고 있다. <그림 4>는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취학률증가(1939~55)와 양반호비율 및 대과급제자비율 간에 상관관계를 그린 것인데, 이 두 그림을 통해 양자간의 이러한 음(-)의 관계가 몇몇 '이상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간 도별 차이가 취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제변수에 도별 더미를 포함시켰지만, 모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취학을 증가와 양반호수비율 및 대과급제자비율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enrollment rates with ratio of Yanban class and successful candidates of Civil Examination)



요약하면, 〈표 2〉의 추정결과는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를 통해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취학률의 증가 모두를 농지개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농지개혁이 취학률의 상승에 기여한 몫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농지개혁의 순기여도는 농지개혁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취학률을 추정하여 이를 실제 취학률을 비교함으로써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식 (1)의 계수 값 0.38과 평균소작지율 0.59를 이용하여 반사실적 취학률을 구해보면 약 66.3%로 계산된다.<sup>15)</sup> 따라서 실제 1955년 취학률 81.42%와 차이인 15.1%(=81.4-66.3)가 이 기간 동안 농지개혁이 취학률에 미친 순증가분의 크기(partial effect)가 된다.<sup>16)</sup> 해방 이후에만 한정하면, 농지개혁이 취학률 증가에 미친 효과는 약 9.6%였다.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학교밀도, 공장밀도 그리고 입학시험 폐지의 기여도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sup>17)</sup>

이 표에 따르면, 농지개혁, 학교밀도, 공장밀도 그리고 입학시험 폐지 등이 네 가지 요인이 이 시기(1938~55년) 취학률 증가분(54.3%)의 약 83%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네 가지 중에서 취학률 증가에 가장

15)  $66.3\% = \exp[\ln(1955\text{년 취학률 } 81.42\%) + \text{계수값 } 0.38 * \ln(\text{소작지율 } 0.59)]$ .

16)  $9.6\% = 34.42\% * \text{기여도 } 0.28$ 이다.

17) 〈표 3〉의 기여도는 〈표 2〉의 식 (1)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크게 기여한 요인은 미군정의 입시제도 폐지였으며, 그 다음이 농지개혁과 학교공급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지개혁의 효과는 입시제도의 폐지 다음의 두 번째이지만, 해방 이후 학교 증설과 교사 양성을 위해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서찬수, 1987), 농지개혁이 이 많은 액수를 투입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취학을 상승에 기여한 몫이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표에 따르면 농촌공업화의 기여도는 위 4가지 요인 중 가장 낮은 5%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전시 체제, 해방, 한국전쟁 등 정치적 충격의 여파로 인해 농촌공업화가 크게 위축되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공업화가 취학을 증가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까지 과소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표 3〉 초등학교 취학률의 증가요인과 기여도, 1938~55(Decomposition of factors affecting on increase in school enrollment rates, 1938~1955)

증가 요인	취학률 증가분(%)	기여도
농지개혁	15.1	0.28
학교공급	11.2	0.21
공장밀도	2.8	0.05
입시제도 폐지	16.3	0.30
기타	9.0	0.17
계	54.3	1.00

## (2) 농지개혁과 취학률의 남녀격차

농지개혁이 이처럼 취학률 증가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면, 취학률의 남녀 갭을 줄이는 데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표 4〉는 앞서 살펴본 〈표 1〉의 자료를 바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여 취학률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취학률’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 〈표 4〉에 함께 제시하지 못했다. 이 표에 따르면, 1930년대 말 남학생의 취학률은 여학생에 비해 3.23배(지원기준)와 2.87배(입학기준) 정도 높았지만, 1955년에는 그 차이가 1.47배로 줄어들었다. 즉 1939~55년 동안 전체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여학생의 취학률이 보다 더 빨리 늘면서 남녀 갭이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농지개혁이 남녀 갭의 축소에 기여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표 4〉 남녀 취학률의 격차, 1938/9~1955/56(Descriptive statistics of gender gap in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s)

변수	1938/39				1955/56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전체취학률, 1938	27.03	3.88	21.00	41.09	81.42	8.24	62.01	96.57
남					96.18	10.22	81.02	130.20
녀					66.64	9.57	41.67	84.08
남/녀					1.47	0.24	1.19	2.56
지원기준취학률, 1939	70.64	14.14	43.14	100.24				
남	105.64	21.06	66.84	147.49				
녀	34.79	9.42	18.84	59.25				
남/녀	3.23	0.69	1.82	6.30				
입학기준취학률, 1939	42.81	5.54	31.81	54.04				
남	62.29	7.74	45.03	75.91				
녀	22.85	4.73	16.57	36.60				
남/녀	2.87	0.46	1.82	3.95				

출처: 〈표 1〉과 같음.

Source: see 〈Table 1〉.

〈표 5〉는 앞서 제시한 모형(1)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분리하여 각기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추정결과는 앞의 〈표 2〉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식 (3)과 식 (6)은 남학생 취학률 증가분에서 여학생 취학률 증가분을 뺀 값, 즉  $\Delta \ln(y^b) - \Delta \ln(y^g)$ 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결과이다. 우선 소작지율부터 살펴보면, 남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의 값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농지개혁이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의 취학률 증가에도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그런데 이 표에 따르면 남녀간 계수 값이 0.38과 0.37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식 (3)과 식 (6)도 두 계수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즉 농지개혁이 남녀 모두 취학률의 상승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소작농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표 5〉 추정결과: 남녀별 취학을 증가의 결정요인, 1938~55/56(Factors affecting gender gap of increases in primary school enrollments rates, 1938~55/56)

취학을기준	입학기준			지원기준		
	남 $\Delta \ln(y^b)$	녀 $\Delta \ln(y^g)$	$\Delta \ln(y^b) - \Delta \ln(y^g)$	남 $\Delta \ln(y^b)$	녀 $\Delta \ln(y^g)$	$\Delta \ln(y^g) - \Delta \ln(y^b)$
종속변수	1	2	3	4	5	6
식						
ln(소작지율) 1938	0.38*** (6.15)	0.37*** (3.30)	-0.01 (-0.09)	0.37*** (5.91)	0.38*** (3.41)	0.00 0.04
ln(취학률) 1939	-0.98*** (-9.28)	-0.73*** (-8.63)		-1.00*** (-9.54)	-0.73*** (-8.65)	
ln(취학률1939 남)- ln(취학률1939 여)			-0.86*** (-10.06)	-9.54	-8.65	-0.86*** (-11.66)
$\Delta$ 학교밀도 1939~55	0.07*** (3.90)	0.14*** (4.25)	-0.06*** (-2.27)	0.07*** (3.70)	0.14*** (4.38)	-0.10*** (-3.53)
$\Delta$ ln공장밀도 1937~55	0.07*** (3.47)	0.05** (2.13)	0.04 (1.20)	0.07*** (3.45)	0.06** (2.16)	0.02 (0.67)
$\Delta$ 쌀생산성 1938~54	-0.03 (-0.83)	-0.07 (-1.19)	-0.02 (-0.27)	-0.03 (-0.84)	-0.08 (-1.26)	0.03 0.50
$\Delta$ ln인구 1938~55	-0.15* (-1.97)	-0.22 (-1.44)	0.002** (2.46)	-0.10 (-1.36)	-0.25 (-1.63)	0.002*** 2.85
ln 경쟁률(남) 1939	0.36*** (4.88)	0.49*** (5.49)	-0.28*** (-3.55)	0.34*** (3.28)	0.51*** (5.60)	-0.31*** (-3.48)
ln 경쟁률(여) 1939	-0.08 (-1.35)	0.20*** (2.73)	-0.26*** (-3.92)	-0.07 (-1.15)	-0.08 (-0.99)	-0.12* -1.89
양반비율 1909	-0.54*** (-3.00)	-0.57*** (-3.44)	-0.05 (-0.31)	-0.53*** (-3.03)	-0.58*** (-3.48)	-0.01 -0.05
ln 대과급제자비율	-0.02*** (-2.46)	-0.01 (-0.84)	-0.01 (-0.37)	-0.03*** (-2.58)	-0.01 (-0.76)	-0.02 -0.96
답작비율	-0.48*** (-4.14)	-0.28* (-1.83)	-0.18 (-1.34)	-0.50*** (-4.44)	-0.26* (-1.69)	-0.36*** (-2.60)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 <sup>2</sup>	0.85	0.80	0.72	0.93	0.85	0.82
샘플수	40	40	40	40	40	40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그런데 농지개혁이 이처럼 남녀 갭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면, 남녀 격차의 축소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5〉의 설

명변수 중에서 남녀 간 계수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찾아보면, 초기 취학률의 남녀격차 외에 학교밀도, 인구, 경쟁률(남), 경쟁률(여) 등 4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식 (3)과 식 (6) 역시 그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중  $\Delta$ 인구의 경우는 (+)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세 변수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즉 인구의 증가는 남녀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나머지 3개의 변수는 남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Delta$ 학교밀도를 비교해보면, 여학생의 계수 값(0.14)이 남학생의 값(0.07)에 비해 2배 정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밀도 1단위 증가가 취학률에 미치는 효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2배 정도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8~55년간 학교밀도는 0.94에서 2.69로 약 2.7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학교 공급의 증가가 취학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남녀 갭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학을 결정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학거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되는 추정결과이다.

<표 6> 남녀별 취학률의 증가요인과 기여도, 1939-55/56(Decomposition of factors affecting on gender gap of increase in enrollment rates, 1938~1955)

증가 요인	남		녀	
	취학률증가	기여도	취학률증가	기여도
농지개혁	17.84	0.35	12.07	0.24
학교공급	10.03	0.19	13.67	0.28
학교밀도	6.94	0.13	3.47	0.07
입시제도 폐지	16.63	0.32	20.11	0.41
계	51.44	1.00	49.32	1.00

식민지시기에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남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식 (3)과 식 (6)에 따르면, 경쟁률(여)뿐 아니라 경쟁률(남)도 남녀 취학률 격차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식민지시기 남학생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던 지역이 여학생의 취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며, 그 높은 교육 열기가 입학시험이 폐지된 이후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취학률을 빠르게 상승시켰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즉 입학시

험의 폐지로 인해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은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었던 것이다.

〈표 6〉은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식 (1)과 식 (2)의 계수 값을 이용하여 농지개혁 등 4가지 변수가 취학을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남녀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남녀별로 기여도의 순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남자의 경우 농지개혁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입시제도의 폐지 순으로 되어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 입시제도의 폐지가 취학을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다음이 학교 공급이며 농지개혁은 세 번째로 되어 있다. 즉 이 표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입학시험의 폐지와 학교공급의 확대였다.

### (3)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s for some omitted variables)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정결과에 대해, 학교 공급의 증가가 취학을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취학률의 상승이 학교공급의 증가를 유도하였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공장밀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농촌공업화가 아이들의 학교 참여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취학률이 높은 곳을 찾아 그 지역에 입지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우려가 제기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도구변수나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를 이용하는 것이다. 〈표 7〉은  $\Delta$ 학교밀도에 대해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하고  $\Delta$ 공장밀도에 대해서는 초기시점(1937)의 공장밀도로 대체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Delta$ 학교밀도의 도구변수로는 초기 시점의 학교밀도(1938년)와  $\Delta$ 인구(1938~55) 등 두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공장밀도는 공장주의 이름을 기준으로 조선인공장과 일본인공장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또한 전체 취학률 외에 남녀를 구별한 입학자 기준과 지원자 기준 취학률을 사용한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7〉에 따르면, 추정결과는 OLS방법으로 추정한 앞의 〈표 2〉 및 〈표 5〉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작지율과 여타 통제변수들도 여전히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구변수를 사용한  $\Delta$ 학교밀도의 부호도 양(+)<sup>1</sup>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 간 계수값의 격차도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1단계 추정의 F통계량은 모두 'rule of dumb'의 기준인 10을 넘고 있어 '약한 도구변수'의 가능성은 낮으며, 과대식별 검증의 Hansen J통계량의 p값은 두 도구변수가 학교밀도 이외의 경로를 통해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Wu-Hausman의 내생성 검증에

〈표 7〉 추정결과: 취학률증가의 결정요인(2SLS)(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primary enrollment rates(2SLS))

종속변수: $\Delta \ln(y) = \ln(\text{취학률}1955/56) - \ln(\text{취학률}1938/9)$							
취학률 기준 대상 식	입학자기준 취학률 1938			지원자기준 취학률 1938			전체취학 률 1939
	전체 1	남 2	녀 3	전체 4	남 5	녀 6	전체 7
ln소작지율 1938	0.35*** (4.61)	0.35*** (4.24)	0.31*** (3.14)	0.32*** (3.91)	0.34*** (4.21)	0.31*** (3.16)	0.32*** (4.82)
ln 취학률 1938/39	-0.78*** (-8.98)	-0.94*** (-7.77)	-0.71*** (-9.39)	-0.74*** (-7.57)	-0.96*** (-8.05)	-0.71*** (-9.27)	-0.75*** (-10.76)
△학교밀도 1938/39~55	0.07** (2.20)	0.07* (1.95)	0.13*** (2.73)	0.09** (2.36)	0.08** (2.12)	0.13*** (2.69)	0.07** (2.24)
공장밀도(조선인) 1937	0.13** (2.35)	0.11* (1.76)	0.17** (2.31)	0.13** (2.28)	0.10* (1.65)	0.18** (2.32)	0.10* (1.89)
공장밀도(일본인) 1937	-0.65** (-2.49)	-0.64** (-2.03)	-0.98*** (-2.82)	-0.77*** (-2.61)	-0.63** (-2.03)	-0.99*** (-2.81)	-0.54* (-1.95)
ln 경쟁률(남) 1939	0.45*** (4.78)	0.37*** (3.66)	0.48*** (4.36)	0.18 (1.35)	0.31** (2.29)	0.49*** (4.46)	0.42*** (5.27)
ln 경쟁률(여) 1939	-0.02 (-0.20)	-0.10 (-1.13)	0.20** (2.22)	-0.10 (-1.07)	-0.09 (-0.95)	-0.10 (-0.90)	-0.02 (-0.35)
양반비율 1909	-0.28*** (-3.28)	-0.26** (-2.27)	-0.43*** (-5.62)	-0.27** (-3.95)	-0.25** (-2.22)	-0.45*** (-5.73)	-0.28*** (-2.96)
ln대과금제자비율	-0.04*** (-4.88)	-0.04*** (-3.17)	-0.03** (-2.41)	-0.04*** (-3.98)	-0.04*** (-3.20)	-0.03** (-2.37)	-0.04*** (-5.53)
답작비율	-0.36*** (-3.23)	-0.44*** (-3.92)	-0.22 (-1.51)	-0.27** (-2.03)	-0.45*** (-4.09)	-0.20 (-1.40)	-0.40*** (-3.21)
도더미	yes						
Adj. R <sup>2</sup>	0.80	0.79	0.80	0.87	0.90	0.85	0.82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F통계량	13.79	14.40	12.09	14.07	14.48	12.06	15.87
과대식별 p값	0.97	0.59	0.30	0.98	0.46	0.27	0.22
내생성 검증 p값	0.81	0.50	0.54	0.74	0.44	0.52	0.74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표 8〉 추정결과: 강건성 검증(Robustness test)

식	종속변수: $\Delta \ln(y) = \ln(\text{취학률} 1955) - \ln(\text{전체취학률} 1938)$							
	1	2	3	4	5	6	7	8
ln소작지율 1938	0.38*** (6.80)	0.37*** (6.16)	0.34*** (5.50)	0.35*** (6.13)	0.23** (2.07)	0.38*** (6.69)		
소작지율 1938							0.79*** (6.27)	
$\Delta$ 소작지율 1938~60							0.67*** (4.18)	
ln취학률 1938	-0.76*** (-10.47)	-0.78*** (-10.62)	-0.75*** (-10.65)	-0.69*** (-11.79)	-0.92*** (-9.02)	-0.77*** (-10.53)	-0.78*** (-9.37)	-0.78*** (-10.87)
학교밀도 1938/9~55	0.09*** (4.82)	0.09*** (4.64)	0.10*** (5.26)	0.08*** (4.70)	0.15** (2.21)	0.09*** (4.43)	0.06*** (3.40)	0.09*** (5.32)
$\Delta \ln(\text{공장밀도})$ 1937~55	0.05*** (3.70)	0.05*** (3.05)	0.05*** (3.55)	0.06*** (4.91)	0.06*** (2.73)	0.05*** (3.60)	0.05*** (3.12)	0.05*** (3.40)
$\Delta$ 쌀생산성 1938~55	-0.04 (-1.18)	-0.04 (-0.99)	-0.02 (-0.64)	-0.00 (-0.13)	-0.09 (-1.58)	-0.04 (-1.17)	-0.04 (-0.97)	-0.05 (-1.41)
$\Delta \ln$ 인구 1938~54	-0.13 (-1.34)	-0.13 (-1.39)	-0.12 (-1.22)	-0.03 (-0.40)	-0.25 (-0.90)	-0.13 (-1.29)	-0.11 (-1.02)	-0.14 (-1.47)
ln경쟁률(남) 1939	0.43*** (7.27)	0.40*** (6.72)	0.40*** (7.63)	0.43*** (8.55)	0.24** (1.99)	0.42*** (7.33)	0.39*** (5.91)	0.44*** (7.48)
ln경쟁률(여) 1939	-0.02 (-0.33)	-0.01 (-0.14)	-0.02 (-0.51)	-0.01 (-0.15)	0.05 (0.37)	-0.01 (-0.33)	-0.06 (-1.23)	-0.05 (-1.33)
양반호비용 1909	-0.47*** (-3.38)	-0.48*** (-3.78)	-0.51*** (-3.95)	-0.56*** (-3.63)	-0.31** (-2.50)	-0.48*** (-3.31)	-0.36*** (-2.61)	-0.43*** (-3.05)
ln 대과금제자 비용	-0.03*** (-3.15)	-0.03*** (-3.78)	-0.03*** (-4.90)	-0.03** (-2.50)	-0.03*** (-3.95)	-0.03*** (-3.06)	-0.02*** (-2.73)	-0.03*** (-3.12)
답작 비용 1938	-0.44*** (-3.81)	-0.39*** (-3.21)	-0.35** (-2.38)	-0.35*** (-3.03)	-0.47*** (-3.32)	-0.45*** (-3.77)	-0.44*** (-3.70)	-0.45*** (-3.99)
한글해독자비용 남 1930		0.69 1.44						
한글해독자비용 여 1930			1.50** (2.26)					
서당밀도 1928/38				-0.03*** (-4.61)				
ln(교회밀도) 1922					0.10** (2.30)			
일본인비용 1938						0.43 (0.36)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 <sup>2</sup>	0.84	0.85	0.86	0.86	0.88	0.84	0.81	0.85
표본수	40	40	40	40	22	40	40	40

출처: 〈표 1〉 및 각주 19) 참조.

Source: see 〈Table 1〉 and footnote 19.

주: (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서는 모든 식에서 내생성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표 7>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장밀도의 계수이다. 이 계수값에 따르면, 조선인 공장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이후 취학률도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일본인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취학률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결과만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변-일본인의 귀환, 국가귀속과 귀속재산의 불하-에 따른 일본인 공장의 생산위축이 취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변수나 피설명변수 양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설명변수의 누락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표 8>의 식 (2)~(6)은 앞의 모형(1)에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락변수들 - 남녀별 한글해독자비율(1930년), 일본인비율, 서당밀도, 교회수 - 을 추가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며<sup>18)</sup> 식 (1)은 비교를 위해 <표 2>의 식 (1)을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농지개혁 이후 소작지율이 미미한 수준에서 군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하였지만, 만일 농지개혁 이후에도 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추정결과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다. 식 (7)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1938년 소작지율 대신에 1938년 소작지율에서 1960년 소작지율을 뺀 차분값을 사용한 추정결과이다. 식 (8)은 비교를 위해 로그를 취하지 않는 1938년 소작지율을 사용한 추정결과이다.

『농업국세조사』에 따르면, 농지개혁 이후 소작지율은 1955년 5.5% 전후에서 1960년에는 11.5%로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지역별 차이도 작지 않아 1960년 현재 5개 군에서 소작지율이 15%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표 9>의 추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 소작지율과 1938년 소작

18) 남자(여자) 한글해독자비율은 한글만 아는 남자(여자)/남자(여자)인구수이며, 서당 밀도= $(4*4*3.14*서당수)/면적(km^2)$ , 교회밀도= $교회수/면적(km^2)$ 이며, 일본인 비율= $일본인/(조선인+일본인)$ 이다. 추정에 사용된 한글해독자 비율은 『조선국세조사』(1930년판)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서당수는 『경상북도통계년보』(1928년판)과 『경남년감』(1938)에서, 그리고, 교회수는 『慶尙北道教育及宗教一般』(1922)로부터 옮겨왔다. 1960년 소작지율은 『농업국세조사』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일본인 비율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발행, 『도세일반』(1939년)에서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8>의 식 (5)는 경상북도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지을 사이에는 유의수준 1%에서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지개혁 이전 식민지주체가 발달한 지역과 1950년대 재생소작제가 확산된 지역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반성환(1958)과 이만갑(1960)에 따르면, 1950년대의 소작농들 중에는 농지개혁으로 일시 자작농이 되었다가 생활고로 다시 토지를 되판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표 8>의 식 (7)은 소작제가 농지개혁으로 해체되었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확대된 사실을 반영하더라도 농지개혁의 취학을 증가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이러한 여러 의구심에 대해, 추정결과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의 추가에 따라 계수 값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었지만, 소작지율을 포함한 모든 변수가 여전히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50년대 후반 재생소작제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여전히 취학을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1960년 소작지율과 1938년 소작지율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ratio of tenanted land in 1960 and ratio of tenanted land in 1938)

종속변수: 소작지율(1960)		
식	1	2
ln(소작지율) 1938	0.07*** (3.38)	0.06*** (2.80)
미곡생산성 1938		0.05** (2.75)
답작비율 1938		-0.15*** (-3.40)
ln(인구밀도) 1938		-0.06** (-2.30)
도 더미	yes	yes
Adj. R <sup>2</sup>	0.25	0.35
표본수	41	41

출처: <표 1> 및 각주 19) 참조.

Source: see <Table 1> and footnote 19.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19) 1950년대 중반부터 확대된 이른바 ‘재생소작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는 ‘반봉건제설’ 또는 ‘근대적 임대차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추정 결과는 1950년대의 소작제가 식민지주체와 무관한, 농지개혁 이후 새롭게 생겨난 임대제도라는 주장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1950년대 재생소작제의 발생경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倉持和雄(1983)을 참조.

그런데 <표 8>은 추가된 통제 변수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 (2)와 식 (3)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아이들의 학교 참여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이것은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증결과(Connelly and Zheng, 2003)와도 일치한다.<sup>20)</sup> 식 (4)는 서당밀도와 취학을 증가할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시기 서당은 공교육의 확대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며(古川宣子, 1900: 140쪽의 표 1 참조),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예비학교 또는 초등학교 입학시험에서 탈락한 아동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그 성격이 다소 변화되었다(오성철, 2000: 116-118). 그럼에도 이 추정결과는 공교육과 서당교육이 보완관계가 아니라 대체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밀도를 포함시켜 얻은 식 (5)의 추정결과도 흥미롭다. 경남지방의 교회 수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하여 샘플의 대상이 경북지방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5)는 교회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취학률이 보다 빨리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2절에서 개신교가 서구뿐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인적자본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지만, 식 (5)의 추정결과는 20세기 전반 한국에서도 개신교의 보급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0) 『국세조사』는 한글만 해독가능한 자와 한글과 일본어 모두 독해가 가능한 자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에만 취학률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자의 경우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추정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남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한글뿐 아니라 일본어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글만 해독가능한 자는 학교가 아니라 자기 학습이나 강습소, 야학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한글을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글과 일본어 모두 독해가 가능한 자와 취학률 증가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한글만 해독가능한 사람의 비율과 취학률 증가 사이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동료효과'(peer effect) 혹은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중에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자식의 취학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여자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소득 수준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표 9>의 한글해독자비율(여자)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반영(capture)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한글해독자비율이 경제력 수준을 반영했다면, 취학률증가는 한글만 해독가능한 여성의 비율뿐 아니라 한글과 일본어 모두 독해가 가능한 여성의 비율과도 양(+)의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양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한글해독자비율(여자)이 소득수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본인 비율을 추가한 식 (6)의 추정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식 (6)은 식민지 시기 '재조 일본인'의 존재가 조선인들의 취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추정결과이다 Acemoglu et al.(2001, 2002)와 Glaeser et al.(2004)는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인의 많고 적음이 식민정책뿐 아니라 독립 이후의 제도와 인적자본의 축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 바 있다. 반면에 Easterly and Levine (2016)는 비록 이민자의 비중이 작은 식민지였다 하더라도, 그 소수의 서양 이민자가 인적자본의 확산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음을 강조하였다. Wietzke(2015)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지역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교사와 이주자 중 어느 쪽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선교사 보다는 이주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식 (5)와 (6)에 따르면, 식민지조선에서는 이와 반대로 개신교는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인 이주자들은 조선인의 취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21)</sup>

#### (4) 농지개혁과 학교공급과의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농지개혁이 학교 공급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lor et al.(2009)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성공적 사례로 예시하면서, 해방 이후 학교공급과 취학률이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영향력 상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한국의 지주들이 공교육의 투자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더구나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

21) 해방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재조 일본인'들의 회고담과 이를 분석한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식민지 시기 일본인과 조선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은 채 각자의 커뮤니티 안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유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재조 일본인 2세인 森崎和江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뒤편 숲 너머 아래에는 조선인 마을이 있었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 주위에는 생활양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가족들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 이질적 가치관과의 공존 세계가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다."(森崎和江, 2007: 94-95; 이수열, 2014: 110에서 재인용). 이수열은 여러 재조 일본인의 회고담을 분석한 뒤, "식민지는 공존하면서도 교류하지 않는 이중사회"(이수열, 2014: 12)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 소멸과 학교공급의 확대 간에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여러 실증연구들은 식민지시기 지주들이 많은 기부금을 내는 등 보통학교 설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한우희, 1990; 박진동, 1998; 오성철, 2000; 임삼조, 2006). 어느 쪽의 주장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다음의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자.

$$\Delta \ln(\text{학교수})_i = \alpha_0 + \alpha_1 (\text{소작지율}_{1938})_i + \Omega \Sigma \Pi + e_i \quad (2)$$

피설명변수인  $\Delta \ln(\text{학교수})$ 는 1938~55년간 로그를 취한 학교수의 일차차분값이며, 설명변수는 1938년도 소작지율과 학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통계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sup>22)</sup> Galor et al.(2009)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 (2)에서  $\alpha_1$ 의 부호는 (+)가 도출될 것이다. 공교육 확대에 걸림돌이 된 지주계급이 농지개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 불평등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학교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추정결과는 <표 10>에 정리하였다. 식 (1)~(5)은 분석 기간이 1938~55년이며, 식 (6)~식 (9)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학교 수를 알 수 있는 경북지방에 한정하여 1945~55년도를 기간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먼저 식 (1)부터 살펴보자. 식 (1)은 소작지율 외에 통제변수로 1938년 학교수와  $\Delta$ 인구(1938~55)만을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인데, 식 (1)에 따르면 이 세 변수가 1938~55년간 학교수 증가의 84%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식 (1)은 피설명변수  $\Delta \ln(\text{학교수})$ 와 초기시점의 학교 수와는 음(-)의 관계가, 그리고  $\Delta$ 인구와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식은 학교의 공급이 '랜덤'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기 시점에 학교의 절대 숫자가 적거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식 (1)에 따르면, 이 두 변수가 학교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음에도 소작지율의 부호는 (+)가 아니라 (-)를 보여주고 있다. 식 (2)에서는 공장밀도, 경쟁률, 양반호비율 등 취학률에

22) 소작지는 대지주뿐 아니라 중소지주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작지율이 지주계급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적절한 대변수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본 논문 부록의 <부그림 1>에 따르면 30정보이상 대지주비율과 소작지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킨 추정결과이다. 식 (2)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된 통제변수들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반면 위의 세 변수는 여전히 1~5% 유의수준에서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0〉 추정결과: 학교공급의 결정요인(Factors affecting supply of primary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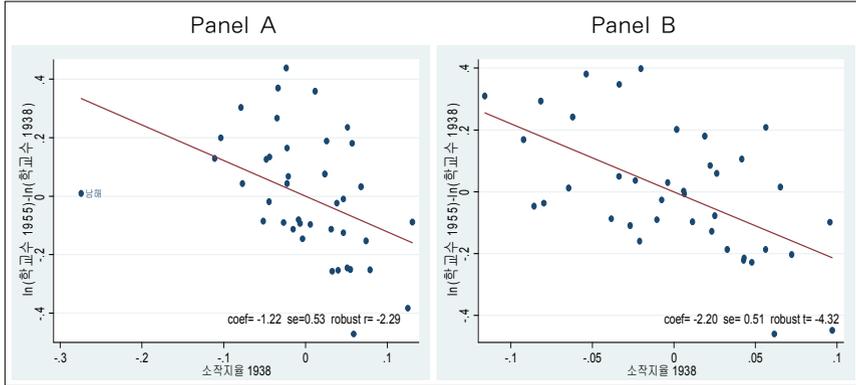
종속변수: ln(학교수 1955/56)-ln(학교수 1938/1945)									
시기(대상지역)	1938~55(경북+경남)					1945~55(경북)			
식	1	2	3	4	5	6	7	8	9
소작지율	-1.10**	-1.13**	-2.20***						
1938	(-2.35)	(-2.20)	(-4.32)						
소작지율 답				-2.30***		-1.45***	-1.62**	-0.71	-1.14
1938				(-4.04)		(-3.46)	(-2.31)	(-1.49)	(-1.52)
소작지율 전					-2.00***				
1938					(-4.72)				
ln 학교수	-1.03***	-1.02***	-1.05***	-1.05***	-1.04***	-0.24	-0.16	-0.07	-0.09
1938/45	(-13.32)	(-11.90)	(-11.91)	(-12.44)	(-11.72)	(-1.49)	(-1.04)	(-0.47)	(-0.62)
학교밀도								-0.41***	-0.35**
1938								(-2.96)	(-2.43)
△인구	0.01***	0.02***	0.02***	0.02***	0.02***	0.01**	0.01***	0.003	0.01**
1938/41~55	(9.62)	(6.37)	(7.76)	(8.00)	(7.44)	(2.44)	(3.08)	(1.56)	(2.55)
공장밀도 1937		0.15	0.11	0.00	0.23		0.17		0.13
조선인공장		(0.83)	(0.74)	(0.00)	(1.54)		(1.07)		(0.87)
공장밀도 1937		-0.09	-0.76	-0.31	-1.21*		-1.26*		-1.16**
일본인공장		(-0.10)	(-1.10)	(-0.46)	(-1.66)		(-1.88)		(-1.99)
ln 경쟁률(남)		-0.23	-0.32*	-0.37*	-0.23		-0.24		-0.31
1939		(-1.05)	(-1.76)	(-1.85)	(-1.32)		(-1.18)		(-1.43)
ln 경쟁률(여)		0.01	0.26*	0.22	0.28**		0.00		0.19
1939		(0.07)	(1.83)	(1.44)	(2.32)		(0.02)		(1.06)
양반호수비율		-0.17	-0.15	-0.07	-0.40		-0.19		-0.35
1909		(-0.54)	(-0.45)	(-0.23)	(-1.37)		(-1.04)		(-1.69)
과거금제자		-1.66	-1.89	-2.28	-0.82		-0.006**		-0.005**
비율		(-0.39)	(-0.46)	(-0.58)	(-0.19)		(-2.15)		(-2.16)
답작비율		-0.17	-0.02	0.13	-0.44		-0.61**		-0.21
		(-0.44)	(-0.07)	(0.32)	(-1.38)		(-2.19)		(-0.69)
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Adj. R <sup>2</sup>	0.84	0.85	0.87	0.87	0.87	0.25	0.55	0.46	0.65
표본수	40	40	39	39	39	22	22	22	22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그림 5〉 학교수의 증가와 소작지율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supply of primary schools in 1938~55 and ratio of tenanted land in 1938)



〈그림 5A〉는 혹시 이 추정결과가 몇몇 ‘이상치(outlier)’로 인한 ‘가짜’(spurious relationship)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양자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좌측에 홀로 떨어져 있는 남해군이 ‘이상치’로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가짜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해군을 제거한 식 (3)에서 보다 더 양호한 추정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그림 5B〉는 양자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그림으로 확인한 것이다). 식 (4)와 식 (6)은 소작지율을 전과 답으로 나누어 추정한 것인데, 결과는 식 (3)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농지개혁 이후 학교공급이 빠르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기에 지주계급의 완강한 저지로 인해 학교시설의 절대수가 너무 적어 소작지율과 학교증가율간의 음(-)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식 (6)과 식 (7)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두 식은 해방 이후부터 설립된 학교수의 증가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지주계급이 학교공급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6)과 식 (7)은 농지개혁 이전에 소작지율이 높았던 지역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수가 느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는 지주계급이 사라졌는데도 왜 학교공급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을까? 식 (8)과 식 (9)는 식 (6)과 식 (7)에 1938년 학교밀도를 추가하여 얻은 추정결과이다. 이 두 식에 따르면, 1938년 학교밀도의 계수 값은

음(-)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소작지율의 계수 값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두 식은 농지개혁 이후 학교의 공급 속도가 느린 이유가 해방 이전 소작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학교의 공급수가 많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sup>23)</sup> 요약하면, <표 10>의 추정결과는 식민지 시기 지주 계급들이 공교육 확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설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 V. 결 론

이 글은 1938~1955년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지개혁의 인적자본 축적에 미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쓰여 졌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군 레벨 자료를 이용하여 농지개혁이 포함된 1938~1955년간 취학을 증가분을 종속변수로 하고 농지개혁 이전 소작지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1차 차분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농지개혁 이외의 요인이 취학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의 우측에 학교공급, 공업화, 인구, 경쟁률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추정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개혁은 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를 통해 취학을 증가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alor et al.(2009)과 Galor(2011)가

23)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alor et al.(2009)는 19세기 미국의 지역별 토지불평등도와 일인당 교육지출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면서 이를 지주계급이 공교육 확산에 반대한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주계급이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교육지출보다는 지주 계급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과 정부보조금 그리고 학교밀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논문 부록의 <부표 2>는 농지개혁 이전 시기인 1939년 소작지율과 학교밀도, 그리고 일인당 기부금과 보조금을 합친 금액과의 관계를 보여준 추정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농지개혁 이전 시기에 이 두 변수와 소작지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아니라 U자형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 (3)과 식 (6)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학교밀도와 일인당 기부금+보조금이 가장 낮은 소작지율을 계산하면, 41개 지역중에서 하위 14~16번째에 해당되는 0.55~0.57로 나타났다. 즉 소작지율이 0.55를 넘어서면서부터 토지불평등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기부금과 정부보조금 액수가 증대되고 학교숫자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장하는 정치경제학적 채널을 통한 취학률 증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양반계층보다는 근대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일반 상민층에서 학교의 참여열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회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취학률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결과는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30년 현재 문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평안남도이며, 평안북도과 황해도가 경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에 이어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노영택 1994: 109). 반면 문맹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이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였다. 혹시 여성의 문맹률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여 남자만 순위를 매겨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양반의 고장'인 경상북도가 문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조선의 예루살렘'인 평양과 그 주변 西鮮지방의 문맹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일제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유교보다는 근대 기독교의 영향이 보다 더 컸다는 본 논문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

이 논문에서 또 하나 확인한 사실은 '재조선 일본인'의 존재가 조선인들의 취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민주의의 여러 영향중에서 이주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유럽이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의 제도와 인적자본의 축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Acemoglu et al., 2001, 2002; Glaeser et al., 2004; Easterly and Levine, 2016).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를 대상으로 선교사와 이주자 중 어느 쪽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Wietzke(2015)에 따르면, 선교사보다는 이주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민지 조선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재조 일본인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갔는지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경남시보사 (1938), 『경남연감』.
- Kyöngnam sibosa (1938), *A South Kyöngsang Province Yearbook*.
- 경상남도, 『도세일반』(1939, 1956년).
- Kyöngsang namdo (1939, 1956), *A Booklet on South Kyöngsang Province*.
- 경상북도 (1922), 『慶尙北道教育及宗教一般』.
- Kyöngsang bukdo (1922), *A Booklet on Education and Religion in North Kyöngsang Province*.
- 경상북도, 『경상북도통계년보』(1928년판).
- Kyöngsang bukdo (1928), *A statistical Yearbook of North Kyöngsang Province*.
- \_\_\_\_\_, 『도세일반』(1928~1939, 1956년).
- Kyöngsang bukdo (1928~39, 1956), *A Booklet on North Kyöngsang Province*.
-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편 (1982), 『경북교육사료』.
- School Board of Kyöngsang bukdo (1982), *A Historical Records of Education in North Kyöngsang Province*.
- 권병탁 (1984),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 기여,” 『농업정책연구』, 11(1), 191-207.
- Kwon, Byung Ttak (1984), “Process of Land Reform and Its Economic Contributions to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Policy*, 11(1), 191-207.
- 김낙년 (2013), “식민지기 조선의 소득불평등 1933-194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55, 249-279.
- Kim, Nak Nyeon (2013), “Income Inequality in Colonial Korea, 1933-194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5, 249-279.
- 김부자 (2008), “식민지 시기 조선 보통학교 취학동기와 일본어 - 193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7, 39-55.
- Kim, Pu ja (2008), “A Motivation of Korean Primary School Attendance and Japanese in colonial Korean : Mainly in the 1930’s,” *Sociology and History*, 77, 39-55.

- 김성보 (2001), “입법과 실행과정을 통해본 남한 농지개혁의 성격,” 홍성찬 편 (2001),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 Kim, Sung Bo (2001), “A Characteristic of Land Reform from the Legislation and Execution Process,” Hong, Sung Chan(ed.), *A Study on the Land Reform in Korea*, Yonse Univ. Press.
- 김성호 외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in Sung Ho et al. (1989), *A History of Land Reform in Ko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ress.
- 노영택 (1994), “일제시기의 문맹률추이,” 『국사관논총』, 51, 90-133.
- Noh, Young taek (1994), “A Trend in Illiteracy in Colonial Korea,” *Academic Collections on Korean History*, 51, 90-133.
- 농림부. 『농업국세조사』(1960년판), 1963-64.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1960), *A National Census on Agriculture*.
- 동선희 (2011),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도평의회, 도회의원을 중심으로』, 선인.
- Dong, Sun Hee (2011), *Colonial Power and Local Elites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Members of Provincial Council*, Sunin Press.
- 박기주 (2012), “식민지기 조선인 초등교육 확대의 통계적 분석,” 『경제사학』, 52, 87-116.
- Park, Ki joo (2012), “The Rise of Public Primary Schooling in Colonial Korea,”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2, 249-279.
- 박진동 (1998), “일제강점하(1920년대) 조선인의 보통교육 요구와 학교 설립,” 『역사교육』, 68, 59-97.
- Park, Jin Dong (1998), “Korean’s Demand for Primary Education and Its Establishment of Common School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1920’s,” *Journal of History Education*, 68, 59-97.
- 반성환 (1958), “농지개혁후의 농지이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농업경제연구』, 1, 33-48.
- Ban, Sung Hwan (1958), “Shift of Land Ownership after Land Re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 33-48.
- 서찬수 (1987), “한국의 인적자본 축적과정과 그 요인,” 『경제연구』, 5, 69-90.
- Seo, Chan Soo (1987),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Its Main

- Caus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conomy*, 5, 69-90.
- 손인수 (1992),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 Son, In Soo (1992), *Educational Policy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inyoung Press.
-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 Song, Jun Ho (1987), *A Social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Era*, Iljokak Press.
- 안병직 (1989), "식민지 조선의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 -1930년대의 공업화를 중심으로-", 안병직 외(편)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 An, Byung Jik(1989),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ucture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1930s," An Byung Jik et al(eds.), *Economic Structure in Colonial Korea*, Bibong Press.
-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 Oh, Sung Chul (2000), *A Form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Colonial Korea*, Kyoyook Science Press.
- 오천석 (1964),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출판사.
- Oh, Chun Seok (1964), *A New Histor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Modern Education Press.
- \_\_\_\_\_ (1972), "군정 문교의 증언," 『새교육』, 1972.8.
- Oh, Chun Seok (1972), "A Testimony on the Education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Education*, 1972.8.
- 우대형 (2001), "농지개혁의 생산성 증가효과,"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 Woo, Dae Hyung (2001), "Effect of the Land Reform o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South Korea," Hong, Sung Chan(ed.), *A Study on the Land Reform in Korea*, Yonse Univ. Press.
- 이만갑 (1960), 『한국농촌의 사회구조-경기도 6개 촌락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연구도서관.
- Lee, Man Gap (1960), *A Social Structure in Korean Agricultural Villages*, Library of Korean Studies Press.
- 이만규 (1949), 『조선교육사 II』 거듭(1988년 복간본).
- Lee, Man Gyu (1949), *An Educational History in Korea II*, Georum Press (republished version 1988).
- 이명휘 (1992), "1950년대 농가경제 분석," 『경제사학』, 16, 145-197.

- Lee, Myung Hwi (1992), "An Analysis of Peasant Economy in 1950s Korea," *Journal of History Education*, 16, 145-197.
- 이수열 (2014),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경험: 식민 2세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0, 99-122.
- Lee, Soo Yeol (2014), "The Colonial Experience of Second Generation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Writers among Second Generation Japanese Settlers," *Journal of Koreanology*, 50, 99-122.
- 이현창 (1997),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 Lee, Hung Chang (1997), *Comments and Interpretation on the Statistical Survey on Family Register in Korea (1910)*,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ress.
- 임삼조 (2006), "1920년대 조선인의 공립보통학교 설립운동," 『계명사학』, 17, 259-298.
- Lim, Sam-Cho (2006), "The Establishment Movement of the Public Common Schools by Korean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1920s," *Journal of Keimyung History*, 17, 259-298.
- 장상환 (2000),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남지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6(1), 141-176.
- Chang, Sang Hwan (2000), "A Study on the Land Reform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South Kore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6(1), 141-176.
- 장시원 (1984), "식민지하 조선인 대지주 범주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7, 181-278.
- Chang, See Won(1984), "A Study on the Category of the Korean large Landlor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Journal of History Education*, 7, 181-278.
- 전봉관 (2008), 『경성자살클럽』, 살림.
- Jun, Bong Kwan (2008), *Suicide Club in Keijo*, Salim Press.
- 전형택 (1995),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 조선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 Jun, Hyung Take (1995), "The Dissolution and Change of the Status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Er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d.), *Korean History, Vol. 34,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ress*.

- 정병준 (2003),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완료시점 추진동력, 성격,” 『역사비평』, 65, 117-157.
- Chung, Byung Jun (2003), “Reappraisal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Date of Completion, Driving Force and Character,” *Critical Review of History*, 65, 117-157.
- 조석곤 (2007), “토지조사사업과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 『동향과 전망』, 71, 304-335.
- Cho, Seok Gon (2007), “The Effects of Land Survey(1912-1918) and Land Reform(1950-1969) on Land Productiv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71, 304-335.
- 조선총독부 식산국, 『조선공장명부』(1937년판).
- Ministry of Industry,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0, 1938), *Register of Factory in Korea*.
-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1930년판).
-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0), *A National Census in Korea*.
- 차명수 (2014),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한국경제사, 1700~2000』, 해남.
- Cha, Myung Soo (2014), *The Origins of Growth Miracle: An Economic History of Korea, 1700~2000*, Haenam Press.
- 최병택 (2013), “일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 『역사와 현실』, 90, 269-317.
- Choi, Baeng Take (2013), “The Characteristic of School-Financing under the Japanese Rule,” *History and Reality*, 90, 269-317.
- 한국은행조사부 (1956),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 Bank of Korea (1956), *A Register of Enterprises in Industry and Mine in South Korea*.
- 한우희 (1990), “일제식민통치하 조선인의 교육열에 대한 연구: 1920년대 공립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 121-135.
- Han, Woo Hee (1990), “Educational Fervor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Primary School Participation in the 1920s,” *Journal of Educational History*, 2/3, 121-135.
- 허수열 (1981), “일제하 실질임금 추계,” 『경제사학』, 5, 213-246.
- Hur, Soo Yeol (1981), “Estimation of the Real Wage and Its Chan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 213-246.
- 홍성찬 (1992), 『한국 근대 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 Hong, Sung Chan (1992), *Changes in Rural Society and Local Landed Elites in Modern Korea*, Jisik-industry Press.
- 홍성찬 편 (2001),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 Hong, Sung Chan ed. (2001), *A Study on the Land Reform in Korea*, Yonsei Univ. Press.
- 古川直子 (1990), “일제 강점기 초등교육기관의 취학상황,” 『교육사학연구』, 2/3, 136-173.
- Furukawa, Noriko (1990), “Primary School Enrollment in Colonial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History*, 2/3, 136-173.
- 宮嶋博史 (1996), 노영구 옮김, 『양반-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강.
- Miyajima, Hiroshi (1996), *Yangban: Searching for Its Historical Reality*, Gang Press.
- 森崎和江 (2007), 『草の上の舞踊, 日本と朝鮮半島の間生きて』, 藤原書店.
- Kazue, Morisaki (2007), *Ballet on the Grass, Living between Japan and Korea*, Huziwarara Press.
- 長郷衛二 (1938), “토막민과 그 처지에 대해,” 『同胞愛』, 1월.
- Zoko, Oeji (1938), “Urban Squatters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Fraternal Love*, January.
- 倉持和雄 (1983), “농지개혁이후 임대차 문제,” 『농촌경제』, 6(1), 109-122.
- Kazuo, Kuramochi(1983), “Land Leases after Land Reform in South Korea,” *Journal of Rural Economy*, 6(1), 109-122.
- Acemoglu, D., F. Gallego, and J. Robinson (2014), “Institutions,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Economics, Annual Review of Economics*, 6, 875-912.
- Acemoglu, D., S. Johnson, and J. Robi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369-1401.
- \_\_\_\_\_ (2002),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4), 1231-1294
- Acemoglu D., M. Bautista, P. Querubin, and J. Robinson (2008), “Economic and Political Inequality in Development: The Case of Cundinamarca, Colombia,” in Elhanan Helpman, ed.,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lbertus, M., M. Espinoza, and R. Fort (2020), "Land Reform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Evidence from Peru,"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47, 1-23.
- Allen, R. (2003), "Progress and Poverty in Early Modern Europe," *Economic History Review*, 56(3), 403-443.
- Baten, J., and D. Juif (2014), "A Story of Large Landowners and Math Skills: Inequality and Human Capital Formation in Long-run Development, 1820-2000,"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2, 375-401.
- Becker, S., and L. Woessman (2009), "Was Weber Wrong? A Human Capital Theory of Protestant Economic Hist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2), 531-596
- Behrman, R., and C. Knowles (1999), "Household Income and Child Schooling in Vietnam,"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3(2), 211-256.
- Bowles, S. (1978), "Capitalist Development and Educational Structure," *World Development*, 6, 783-796.
- Brown, H., and A. Park (2002), "Education and Poverty in Rural Chin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1(6), 523-541.
- Cha, Myung Soo (2020), "The Productivity Effect of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NIER Working Paper 2020-03, Nac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Choo, Hak chung (1985), "Reinterpret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 in Korea," KDI, Seoul.
- Cinnirella, F., and E. Hornung (2016), "Landownership Concentration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21, 135-152.
- Clemens, M. (2004), "The Long Walk to School: International Education Goals in Historical Perspective," CGD Working Paper No. 37,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Connelly, R., and Z. Zheng (2003), "Determinants of School Enrollment and Completion of 10 to 18 Year Olds in Chin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4), 379-388.

- de Bary, W. (1996), "Confucian Education in Premodern East Asia," in Tu, Wei-ming (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eininger, K., and L. Squire (1998),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259-287.
- Deininger, K., and P. Olinto (2001), "Redistribution,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Washington, DC: World Bank.
- Deininger, K., P. Jin, and H. Nagarajan (2009), "Land Reforms,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Indi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 496-521.
- Dell, M. (2010), "The Persistent Effects of Peru's Mining Mita," *Econometrica*, 78(6), 1863 - 1903.
- Dore, R. (1965), *Education in Tokugawa Jap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uryea, S. (2003), "School Attendance, Child Labor and Local Labor Market Fluctuations in Urban Brazil," *World Development*, 31(7), 1165-1178.
- Engerman S., and K. Sokoloff (2000), "History Lessons: Institutions, Factor Endowments, and Paths of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217-232.
- \_\_\_\_\_ (2002), "Factor Endowments, Inequality, and Paths of Development among New World Economies," *Economia*, 3, 41-102.
- Engerman, S, L. Elisaand, and K. Sokoloff (2009), "The Evolution of Schooling in the Americas, 1800-1925," in David, E., L. Frank, and K. Sokoloff (Eds.), *Human Capital and Institutions: A Long Run 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sterly W., and R. Levine (2016), "The European Origin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21, 225-257.
- Filmer, D., and L. Pritchett (1999), "The Effect of Household Wealth o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35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1), 85-120
- Gallego, F., and R. Woodberry (2010), "Christian Missionaries and

- Education in Former African Colonies: How Competition Mattered,”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19(3), 294-329.
- Galor, O. (2011), “Inequality,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Hanushek E, S. Machin, and L. Woessmann(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Vol. 4, North-Holland.
- Galor, O. and J. Zeira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35-52.
- Galor, O., O. Moav, and D. Vollrath (2009), “Inequality in Landownership, the Emergence of Human-Capital Promoting Institutions, and the Great Diverg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6(1), 143-179.
- Glaeser, E., F. La Porta,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2004), “Do Institutions Cause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9(3), 271-303.
- Glick, P. (2008), “What Policies will Reduce Gender Schooling Gaps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and Interpretation,” *World Development*, 36(9), 1623-1646.
- Go, Sun, and P. Lindert (2010), “The Uneven Rise of American Public Schools to 185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0(1), 1-26.
- Goldin, C., and L. Katz (1999),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The Rise of Secondary Schooling in America, 1910-1940,”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9(4), 683-723
- Goni, M. (2018), “Landed Elites and Public Education in England and Wales. Evidence from School Boards, 1870-99,” working paper. <https://extranet.sioe.org/uploads/sioe2018/goni.pdf>
- Handa, S. (2002), “Raising Primary School Enroll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pply and Deman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9(1), 103-128.
- Huang, J., B. Guo, Y. Kim, and M. Sherraden (2010), “Parental Income, Assets, and Borrowing Constraints and Children’s Post-secondary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4), 585-594.
- Inkeles, A., and D. Smith (1974), *Becoming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Kim, Kihwan, and D. Leipziger (1993), *Korea: A Case of Government-le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Lavy, V. (1996), "School Supply Constraints and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in Rural Ghan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1, 291-314.
- Le Brun, A. Helper, and D. Levine (2011), "The Effect of Industrialization on Children's Education: the Experience of Mexico," *Review of Economic Studies*, 2(2), 1-34.
- Lee, Jong Wha (1997),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1945-1992," Occasional Paper 24.
- Lloyd, C., C. Mete, and Z. Sathar (2007), "The Effect of Gender Differences in Primary School Access, Type, and Quality on the Decision to Enroll in Rural Pakista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3(3), 685-710
- Park, Jongryong (2019), "Land Reform and Crop Production in South Korea in the mid-20th Century," Master's thesis in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Ramcharan, R. (2010),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US Counties and States, 1890-1930,"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 729-744.
- Rawski, E. (1979), *Education and Popular Literacy in Ch'ing Chin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udolf, R. (2012), "Rural Reform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e Biological Standard of Living in South Korea, 1941-1974," mimeo.
- Song, L., S. Appleton, and J. Knight (2006), "Why Do Girls in Rural China Have Lower School Enrollment?" *World Development*, 34(9), 1639-1653.
- Wietzke, F-B (2015), "Long-Term Consequences of Colonial Institutions and Human Capital Investments: Sub-National Evidence from Madagascar," *World Development*, 66, 293-307.
- Zhao, M., and P. Glewwe (2010), "What Determines Basic School Attai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Rural Chin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9, 451-460.

## 〈 부 록 〉

〈부표 1〉 추정결과: 취학을 증가의 결정요인(Factors affecting increases in primary enrollment rates, 1938/9~1955/56)

취학을 기준	입학자기준 취학을 1939			지원자기준 취학을 1939			전체취학을 1938
	대상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식	1	2	3	4	5	6	7
(답소작지율/ 전소작지율) 1938	0.77*** (6.54)	0.74*** (5.70)	0.74*** (3.32)	0.70*** (5.52)	0.71*** (5.65)	0.76*** (3.39)	0.75*** (5.97)
ln 취학을 1938/39	-0.85*** (-10.21)	-1.02*** (-9.71)	-0.76*** (-8.48)	-0.79*** (-8.60)	-1.04*** (-9.94)	-0.75*** (-8.46)	-0.80*** (-11.97)
△학교밀도 1938/39~55	0.08** (4.90)	0.07*** (4.71)	0.13*** (4.69)	0.08*** (4.14)	0.07*** (4.52)	0.14*** (4.83)	0.09** (5.13)
△공장밀도 1937~55	0.04** (2.84)	0.06*** (3.14)	0.04 (1.63)	0.05** (3.03)	0.06*** (3.15)	0.04 (1.64)	0.04*** (2.85)
△쌀생산성 1938~55	-0.06* (-1.73)	-0.05 (-1.41)	-0.09 (-1.51)	-0.03 (-0.68)	-0.05 (-1.44)	-0.10 (-1.59)	-0.06* (-1.72)
ln인구△ 1938~55	-0.21** (-2.40)	-0.16** (-2.07)	-0.25* (-1.64)	-0.21** (-2.24)	-0.11** (-1.48)	-0.28* (-1.83)	-0.15 (-1.63)
ln 경쟁률(남) 1939	0.46*** (6.97)	0.37*** (5.50)	0.51*** (5.80)	0.24** (2.54)	0.39*** (3.71)	0.53*** (5.92)	0.44*** (7.72)
ln 경쟁률(여) 1939	-0.08 (-1.07)	-0.15*** (-2.67)	0.12* (1.73)	-0.15** (-2.52)	-0.14** (-2.44)	-0.14* (-1.90)	-0.09** (-2.18)
양반비율 1909	-0.36*** (-2.73)	-0.43** (-2.53)	-0.44*** (-2.91)	-0.41*** (-3.31)	-0.43** (-2.57)	-0.44*** (-2.92)	-0.35*** (-2.71)
ln대과급제자비율	-0.02*** (-3.18)	-0.02*** (-2.65)	-0.01 (-0.94)	-0.02*** (-2.68)	-0.02*** (-2.77)	-0.01 (-0.83)	-0.02*** (-3.35)
답작비율	-0.33*** (-2.91)	-0.42*** (-3.89)	-0.22 (-1.50)	-0.25** (-2.15)	-0.45*** (-4.20)	-0.20 (-1.34)	-0.37*** (-3.53)
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Adj. R <sup>2</sup>	0.83	0.85	0.80	0.90	0.93	0.85	0.84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출처: 〈표 1〉 참조.

Source: see 〈Table 1〉.

주: ( ) 는 denotes robust t-statistics. \*\*\*, \*\*, \* denotes 1%, 5%, 10%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 The Effect of the Land Reform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n South Korea

Dae Hyung Woo\*

## Abstract

It is generally known that inequality in landownership is an obstacle to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high rates of rent hinders the ability of tenant farmers to invest in human capital, while large landowners hinder investment into public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hypothesis, land reform that resolves the issue of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the two channels of income effect and the elimination of the landlord class. This article uses data from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in forty counties in Gyeongsang Province to see if the 1950 land reform in Kore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f there was a positive effect, then the article examines the channel by which the land reform had an effect. The presumptive result is that the Korean land reform sizably contributed to raising the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through the channel of the income effect. However, there was no discernable effect of the land reform through the political economy channel on the elimination of the landlord class.

**KRF Classification : B030106**

**Key Words : land reform, human capital, primary school enrollment, Japanese colonialism, Confucianism**

---

\* Visiting Researcher, Economic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e-mail: woodaehyung@goggle.com